



2022.6.30.

국회미래연구원 | 연차보고서

2021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2.6.30.

국회미래연구원 | 연차보고서

2021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2021년도 연차보고서

발간사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미래연구원법」에 명시된 설립목적에 따라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은 핵심 아젠더 중심의 중장기 연구를 추진한 해입니다. 불평등, 기후위기, 혁신성장, 저출생·고령화, 국민 통합, 복지체제 등 국가적 차원의 미래 핵심이슈를 중심으로 연구사업 체계를 개편하였으며, 주제별 관련 정책 및 국내외 사례 심층 분석, 미래 전망 등을 바탕으로 입법 관점을 포함한 중장기 전략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의회의 외교적 기여 확대를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하여 핵심 글로벌 아젠더 관련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글로벌 전략대화 등을 통해 국회 차원의 중장기 국제전략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증거 기반 미래연구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도 확대했습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분석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여 이후 정책 설계과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연구를 위해 양질의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여 미래연구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된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의 간사기관으로서, 향후 15년을 내다본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연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향후 3개 정부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아젠더를 국회가 중심이 되어 협의와 조정 과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2021년 연구성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는 독자께서는 개별 보고서를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우리 연구원의 모든 보고서는 홈페이지(www.nafi.re.kr)에서 쉽게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여러분이 국가 중장기적 관점의 아젠더 중심 연구와 국회미래연구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6월

국회미래연구원장 김현곤

김 현 곤

2021년도 연차보고서

목차

I

2021년 연구사업

1. 2021년 연구사업 특징	06
2. 2021년 연구보고서 목록	08
3. 2021년 연구보고서	09
4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45
(1) 국가미래전략 Insight	45
(2) 국제전략 Foresight	60
(3) Futures Brief	63

II

2021년 주요 활동

1. 주요행사	70
2. 미래기고	76
3. 언론보도	79
4. 뉴스레터	80

III

2022년 연구사업 방향

1. 2022년 연구사업 방향	84
2. 2022년 연구과제 목록	85

부록

1. 설립목적	88
2. 주요연혁	88
3. 조직 및 인원	89
4. 비전, 목표, 전략추진체계	90

— 국회미래연구원

I 2021년 연구사업

—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2021년 연구사업 특징
2. 2021년 연구보고서 목록
3. 2021년 연구보고서
4.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 (1) 국가미래전략 Insight
 - (2) 국제전략 Foresight
 - (3) Futures Brief

1. 2021년 연구사업 특징

□ 기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중점연구 강화



- **(개요)** 중점연구, 연구기반, 성과확산으로 연구사업 체계를 재개편하여,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연구로 선택과 집중
- **(중점연구)** 미래예측 및 분석,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국제전략을 통해 미래 환경변화 예측, 미래 대응을 위한 심층 정책 연구, 중장기 국제전략 및 의회외교 지원 관련 연구 수행
 - 국가적 차원으로 집중해야 할 미래 핵심 아젠더 관련 연구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8대 아젠더* 중심 과제 편성

* 미래예측, 불평등, 기후위기, 혁신성장, 저출생·고령화, 국민통합, 복지체제, 국제전략

- **(연구기반_데이터 구축)** 한국인의 행복, 미래대응 지표 등 다양한 연구 데이터를 기획, 생산 및 축적하여 미래 연구의 기반 구축

연도	미래연구 데이터 관련 주요 연구과제 연계 추진사항		
2018	• 미래선호가치 (기반연구)	-	-
2019	• 청소년 가치조사 (파일럿)	• 행복지표체계 • 행복측정기반연구	-
2020	• 미래세대 가치관 조사 (본조사)	• 한국인의 행복조사 •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	• 미래대응 지표개발 (기반연구)
2021	• 한국인의 행복과 가치관 연구		• 미래대응 지표개선 • 지표 활용 정부 중장기계획 분석

- **(연구기반_탐색연구)** 연구진의 전문성 기반 탐색연구를 통해 이론적·학술적·정책적 기여 및 차년도 연구 기획 주제발굴에 활용
- **(성과확산)** 미래연구 교류·협력을 위한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고, 소통 채널 다각화를 통한 연구성과 홍보 및 확산 활동 강화

□ 2021년 연구사업 목록

부문	사업	연구과제
중점 연구	미래예측 및 분석	이머징 이슈 탐색 방법론 고도화 및 주요 이슈 전개 예측
		불평등과 교육: 계층이동성 향상을 위한 제언
	국가중장기 발전전략	기후위기 대응 산업지원 입법과제와 정책효과 예측 연구
		포스트 코로나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과제 도출 연구
		저출생·고령화사회 적응 전략 연구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거버넌스 연구
		사회경제시스템 전환과 새로운 복지체제 구상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국제전략	미·중 갈등이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의회의 역할
		의회외교 강화를 위한 아젠더 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연구 기반	미래연구 데이터구축	한국인의 행복과 가치관 연구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미래사회 지표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미래이슈 탐색연구	연구진의 전문역량 제고 및 향후 중점연구 기획을 위한 탐색연구
성과 확산	연구성과확산	
	연구기획 및 지원	

2. 2021년 연구보고서 목록

부문	사업명	발간번호	연구보고서	책임자
중점연구	미래예측 및 분석	21-01	이머징 이슈 연구	박성원
		21-02	교육 불평등과 계층이동성	성문주
		21-03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과 사회적 이동성 연구	성문주
		21-0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지원 입법과제 연구	정 훈
		21-05	탄소국경조정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예측 연구	정 훈
		21-06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여영준
	국가중장기 발전전략	21-07	국가별 인구구조 및 사회지출 비교 · 분석	이채정
		21-08	저출생 · 고령사회 정책 평가	이채정
		21-09	저출산 · 고령사회 적응 전략 검토	이채정
		21-10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거버넌스 연구: 연합정치를 중심으로	박현석
		21-11	국민통합: 수요자 중심의 의제 형성을 위한 예비 검토	박상훈
		21-12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미국의 경제정책과 중장기 성장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이선화
	국제전략	21-13	한국의 사회경제시스템 전개와 새로운 복지체제 구상	이선화
		21-14	사회경제시스템 전환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체제 비교	이채정
		-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김유빈
		21-15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박성준
		21-16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 세계의 전략과 한국의교예의 제언	차정미
		21-17	The Future of US-China Tech Competition: Global Perceptions, Prospects, and Strategies	차정미
		21-18	대외정책과 의회의 역할: 해외사례 비교 연구	박현석
		21-19	평화과정과 의회의 역할: 해외사례와 국회에 대한 함의	김태경
		21-20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Politics: U.S.-China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limate cooperation	조해인
		21-21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한국경제	박성준
		21-22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 - 기초분석 보고서 -	허종호
		21-23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및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심층분석 보고서	허종호
		21-24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박성원
		21-25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민보경
연구기반	미래연구 데이터구축			

3. 2021년 연구보고서

이머징 이슈 연구

연구책임자 박성원

□ 연구배경 및 목적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는 비록 데이터가 부족하고 공공의제로 다루지 않아 사회적으로 주목받지는 못하지만, 미래 우리사회에 매우 커다란 영향을 미칠 변화의 징조들이다. 사회변화의 중요한 징후를 앞서 예측하고 준비하는 이머징 이슈 연구는 사회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 주요내용

국회미래연구원은 2018년 창립 때부터 여러 방법으로 이머징 이슈 연구를 추진했다. 2020년부터는 대규모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컴퓨터 알고리즘을 개발했으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문가 논의를 통해 2021년 이머징 이슈를 제기했다.

예를 들면, 미중 경쟁의 새로운 양상, 기후변화 대응으로 새로운 공간의 등장,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 탈사회화, 모자이크 가족의 등장 등은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끼칠 이슈들이다. 또한 로봇의 자율성 확대에 따른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토지의 공공성 확대, 우주생활권 진입, 에코 파시즘 등은 일어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사회에 미칠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 정책대안·시사점

우리사회가 아직 문제나 기회로 확신하지 못하는 이슈들을 제기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미래대응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이머징 이슈 연구는 중요하다. 다양한 사회변화에 대한 전조나 징후를 미리 인식한다면 급진적으로 전개되는 변화에도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들일 것이다.

교육 불평등과 계층이동성

연구책임자 성문주

□ 연구배경 및 목적

지난 수년간 한국의 사회적 담론은 불평등과 공정성에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굳건해지고 재생산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또한, 사회 시스템을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계층 배경의 도움이 아닌 본인이 타고난 능력에만 기반해야 한다는 공정성에 대한 담론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현재 한국 사회가 더 불공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최상위 명문대 진학의 공정성에 대한 논의가 격화되고 있다.

□ 주요내용 및 정책대안·시사점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지위 획득 및 자원 분배 과정에서 핵심 자본으로 작용하는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 기회 배분을 중심으로 한국의 교육 불평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분석하였다. 즉,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지난 20세기 출생자들 사이에서 가족 배경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 그리고 젠더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대학 진학 및 대학원 진학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대학 진학에서 나타나는 기회 불평등 정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9개의 대표성 있는 조사 자료를 통합하여 한국 교육 기회 불평등 데이터베이스(KIEOD)를 구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5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가족 배경(부모의 고학력 여부로 측정)의 차이에 따른 대학 진학(전문대 및 4년제 대학 진학 여부)의 격차는 최근 출생자로 올수록 양적 측면에서는 감소했고, 상위권 명문대 진학이라는 질적 측면에서도 격차가 증가했다는 근거 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또한 남녀 간 대학 진학에서의 격차가 감소했고, 최근 출생자들 사이에서는 계층과 관계없이 여성의 우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상위권 대학 진학의 경우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는 성별 격차가 사라지고 계층간 차이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공계열 전공 선택에서 성별 분리 양상은 공고하게 유지되고 최근 들어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특히 상위 계층 남성들이 최근으로 올수록 이공계열 전공을 선택하는 경향이 다른 성별-계층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게 강해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원 진학에 대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및 성별의 영향력 분석을 위해 2010년~2018년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대학 졸업 후 1년 이내 대학원 진학 확률은 구체적인 대학과 세부 전공 통제 후에도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은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가족의 사회경제적 배경(부모 소득, 모친의 대학원 학력)이 성별에 따라 대학원 진학에 끼치는 영향도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성별 대학원 진학 기대 확률의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정책제언들을 제시하였다.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과 사회적 이동성 연구

연구책임자 성문주

□ 연구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기술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디지털화 비용 감소 및 사양산업과 신산업의 등장은 노동시장 내 직무 대체 속도를 증가시키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기계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노동시장에서는 고학력·고숙련 근로자보다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하는 저숙련·저학력 근로자나 임시직·비정규직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겪을 충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저학력·저숙련의 특성을 갖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위한 평생학습의 역할이 강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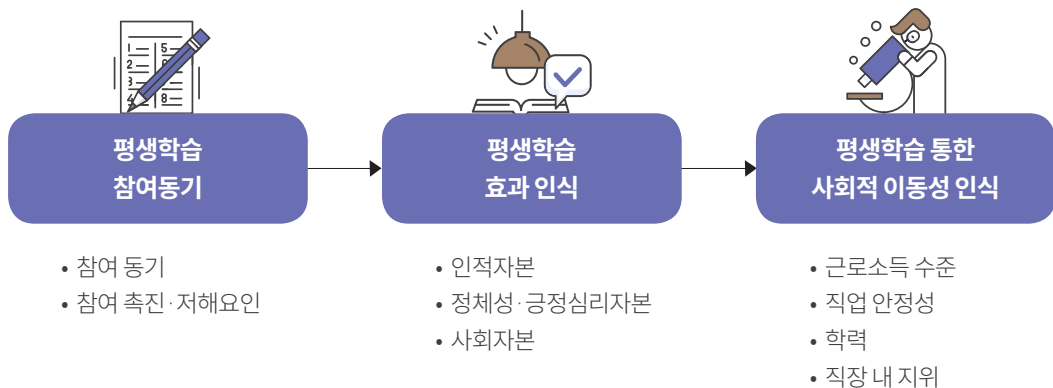
□ 주요내용

본 연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경험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노동시장 취약계층을 경력 초기 저숙련 근로자 집단, 노동시장 입직 이후 형식교육에 참여한 근로자 집단, 경력전환 근로자 집단으로 분류하고, 이들의 평생학습 참여 동기, 기회 및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며, 평생학습 참여가 인적자본, 정체성 및 심리자본, 사회자본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이러한 평생학습 참여 경험이 취약계층의 사회적 이동성 향상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계되는지 질적연구를 통해 파악하였다.

□ 정책대안·시사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사회적 이동성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 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저해요인과 촉진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약계층 근로자가 학습에 대한 어려움에 대처하고 즐거움을 경험하여 지속적으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도록 평생학습 참여 동기 향상을 위한 학습상담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평생학습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대학의 평생직업교육훈련 기능 강화와 일터 현장에서 무형식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노동시장의 장기적 안정성과 취약계층의 사회적 계층이동을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경력개발과 평생학습의 연계, 평생학습 결과의 사회적 인정 체계 확립 및 정착, 사회적 계층이동이 가능한 직종으로의 경력전환 지원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연구의 구조(Framework)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지원 입법과제 연구

연구책임자 정 훈

□ 연구배경 및 목적

기후위기 가속화로 탄소중립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정책을 강화하고 관련 법제를 재편하고 있으며,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정책 강화 및 법제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며, 특히 산업 부문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국내 기후변화 대응 법제와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내외 기후위기 대응 법제와 정책 동향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선진국 수준으로의 법제 개선 방향성과 산업 부문의 입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 조사와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국내외 주요 기후위기 정책 및 법령을 비교·분석하였으며, 전문가 델파이 설문을 통해 국내 기후변화 대응 법제 및 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 주요내용

국내외 주요 정책과 기후변화 법제를 분석한 결과, 국내는 감축 목표와 정책 수립 주체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주요국들의 법제에 공통적으로 담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반영되어 있으나, 산업 부문의 대응 전략 제시가 부족한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델파이 설문 결과, 기존 기후변화 법제 및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형식적 의견 수렴’과 ‘성급하고 폐쇄적인 입법 과정’이 지적되었으며, 산업지원을 위해 선진국 수준으로의 규제를 강화하고 국내 산업계의 탄소중립 전환 촉진과 수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 개선이 필요함이 도출되었다.

□ 정책대안·시사점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기후위기 대응 입법의 개선 방향으로 탄소중립의 이행 구속력 강화와 정책 지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투명하고 참여적인 입법/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 개선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산업지원을 위한 입법 과제로 ‘한국의 산업구조적 상황을 고려한 법제도 모색’의 필요성과 ‘산업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수십년간 우리 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근간이 될 탄소중립 기본법의 개선 방향성과 실질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제도 개선 방안들을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가 기후위기로 인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입법적·정책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탄소국경조정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예측 연구

연구책임자 정 훈

□ 연구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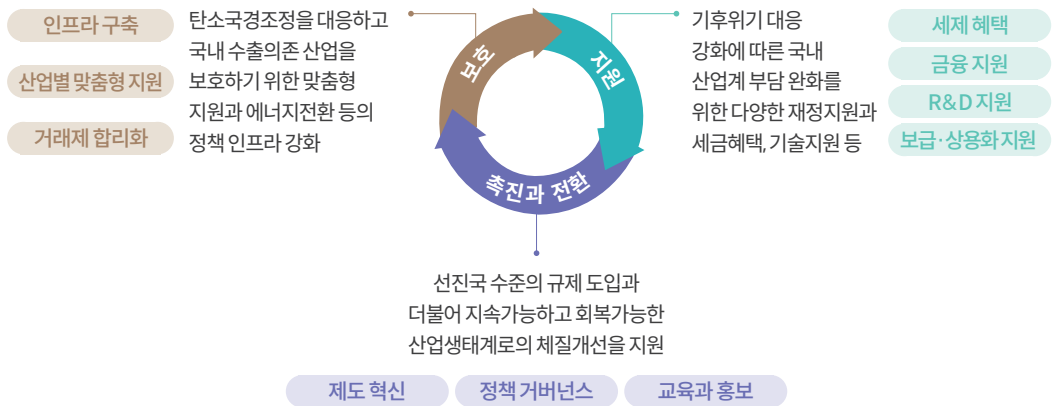
최근 유럽연합(EU)에서 발표한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의 도입은 국제 무역질서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수출의존도가 높고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주력 산업으로 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의 추가 부담 비용 규모를 산출함으로써 탄소국경조정 도입이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그중 주요 정책과제의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 주요내용

CBAM 도입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해 환경산업연관분석(EEIO)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030년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이 전면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계는 수조원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GDP를 비롯한 사회적 효용,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과 같은 저탄소 정책을 이행할 경우 산업 부담액이 감소하는 것을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 강화 및 이행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과제 도출을 위해 전문가 델파이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산업계 촉진과 전환, 지원과 보호라는 방향성을 기반으로 10개의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AHP를 통해 시급성과 효과성을 기준으로 산업지원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① R&D 지원, ②세제 혜택, ③금융지원, ④산업별 맞춤형 지원, ⑤제도 혁신, ⑥보급·상용화 지원, ⑦인프라 구축, ⑧정책 거버넌스, ⑨거래제 합리화, ⑩교육과 홍보 순으로 도출되었다.



이 중 1순위로 도출된 R&D 지원 정책에 대해 연산일반균형(CGE) 모형을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GDP, 사회적 효용,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회복되고 경제체제 전반의 저탄소화를 야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정책대안·시사점

본 연구는 산업지원 정책 발굴과 더불어 산업지원 정책이 경제·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함에 따라, 탄소국경조정 뿐 아니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체계적인 산업지원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확증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 결과가 중장기적 대응이 필요한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마련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을 찾아가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혁신성장을 위한 전략과제 연구

연구책임자 여영준

□ 연구배경 및 목적

우리 경제는 코로나19를 경험하며 글로벌 공급망, 산업경쟁력, 지역사회, 그리고 경제사회 전반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도래함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회복을 논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노멀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미래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성장과 발전 중심의 혁신정책을 넘어, 얼마나 빠르게 충격과 위기 등 불안정 요소를 극복해낼 수 있는지와 관련한 리질리언스 역량 확보가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다.

□ 주요내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 분석연구와 정성적 연구를 상호결합함으로써, 코로나 시대 중장기 환경변화 양상을 특징짓는 메가트렌드 시나리오를 도출하고, 시나리오별 정책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에 따라, 코로나 발발 이후 시기별 환경변화를 특징짓는 주요 동인들을 파악하고, 동인 간 상호작용에 따른 글로벌 환경변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다양한 미래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그리고, 도출한 주요 시나리오별 정책과제를 제안함으로써, 회복탄력적 혁신체제로의 이행을 뒷받침하는 정책대안 탐색을 이뤄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중장기 국가 혁신정책 설계 및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정책대안·시사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전개될 다양한 혁신시스템 내 기회와 위기를 예측하는 데 있어, 시나리오 기반 분석연구는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대안 논의가 파편화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체계적, 통합적 접근에 바탕을 둔 전략적 미래예측 기반 전략도출 연구라는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전략적 미래예측으로부터 제안된 정책과제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취약성을 완화하고, 새로운 기회의 가능성을 강화해 우리나라 혁신체제의 시스템 리질리언스 역량 확대를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별 인구구조 및 사회지출 비교·분석

연구책임자 이채정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각 국가가 놓인 인구변화의 현황과 대응책으로서의 사회지출의 배분 방식을 분석하고,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검토하여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 주요내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별 특성과 사회지출 구조, 자원배분 효율성 등을 분석한 결과, 한국은 경제수준(GDP)에 비해 세수가 낮고 고령인구비율이 상승하고 있다. 한국은 경제수준이 비슷한 국가 중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가장 높지만,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1.0대에 근접했다. OECD 회원국의 특성과 사회지출 규모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총세입과 사회지출 간의 긍정적 상관관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 속하고, 노인인구 비율은 중·저집단에 속하며, 사회지출 규모는 유사한 수준의 노인인구 비율을 가진 국가군에 비해 낮다. 한편,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높고 사회지출이 낮은 국가로, 이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아직 은퇴하지 않은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현저한 저출산에도 불구하고 사회지출 규모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지출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확률변경모형(SFA)을 적용한 결과, 국가별로 소득불평등이나 주관적 삶의 만족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한국은 중위수준을 보였다. 15년 동안, 한국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정권이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연도별, 기본계획별로 크고 작은 변화를 겪었다. 소요예산의 경우 정도 차이가 있었지만 모든 정책분야 예산이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증가율도 높아졌다.

□ 정책대안·시사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계획은 과제를 줄이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 과정을 거쳤다. 정책목표와 관련이 없는 과제는 예산을 점검하고 역량을 실효성 있는 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기본계획에서 제외되고 기존 과제를 분류해 중요도에 따라 자율성을 부여했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보다 효율적으로 개편되기 위해서는 개별 정책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이들 주요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평가

연구책임자 이채정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의 분포를 살펴보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메타평가하였으며, 아동·노인 대상 지역별 사회서비스의 분포와 격차 등을 분석하였다.

□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사회적 위험의 분포 분석 결과, 소득 빈곤뿐 아니라 직접적인 빈곤 경험을 의미하는 물질적 빈곤이 신체적·정신적 건강부터 자살까지 다양한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정신건강이나 자살위험 등 정책적 개입이 필요한 사안은 정부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고, 각종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제 완화에 필수적인 전달체계 구축 및 관리와 관련한 정책 추진과제도 없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의 예산집행률이 낮아, 은퇴 후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을 중심으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추진됐을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장년층을 위한 정책의 달성도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득보장정책의 경우 예산집행률은 다른 정책에 비해 낮았지만 목표달성률은 높았다. 소득보장정책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 현금이전 정책이 많아 다른 정책보다 목표 달성이 수월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아동·노인을 대상으로 한 주요 사회서비스의 분포와 격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서비스의 종류와 지역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대안·시사점

정부는 장기적으로 소득보장정책 등 현금성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교육·의료·주거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정책조합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분석해 정책 기획 및 집행 단계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 인구변화에 대응해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목표집행률이 낮은 보건·의료·일자리·정착사업의 목표달성률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대규모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소득보장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구구조 변화로 촉발된 다양한 정책변화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주요 사회서비스의 분포와 격차를 세밀하게 분석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저출생·고령사회 적응 전략 검토

연구책임자 이채정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국가별 인구구조 및 사회지출 비교·분석과 저출생·고령사회 정책 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책유형별 저출생·고령사회 적응전략을 검토하였다.

□ 주요내용 및 정책대안·시사점

첫째, 소득보장정책은 선진국에 비해 지원 수준이 미흡하고 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해 확대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지방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차등보조율제도의 실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년 정신건강정책은 정신질환 예방과 조기진단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후 경제·노동·주택 등 다른 정책과의 적극적인 연계가 모색되어야 하며, 노인의 경우 지속적인 '살던 자리에 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 AIP)' 추진을 위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과 함께 고령인구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셋째, 돌봄교육정책은 정책대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기존에 설립된 보육시설 및 유치원이나 보육교사, 유치원교사, 방과후 보육사 등의 인력은 수요에 맞춘 효율화가 추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과제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원과 관련해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관계없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자원조달체계의 개편이 추진되어야 한다.

넷째, 일자리정책은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형 사업은 민간형이 아닌 공공형이나 사회서비스형으로 일자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저임금 단기 일자리가 양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정주여건정책은 청년·신혼부부 등 특정 연령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전체 인구와 가구 구조, 가계의 경제상황, 주거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책대상의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사실혼 관계 등의 혼인유형에 해당하더라도 결혼과 유사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저출생·고령사회 적응 전략의 전달체계 재구축 방안을 검토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돌봄 안전망 개념을 도입하여 전반적인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 거버넌스 연구: 연합정치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박현석

□ 연구배경 및 목적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사회갈등을 관리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및 정부 형태의 개선이 필요하다. 선거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이고 타협적인 정치환경을 조성해야 승자독식의 일방주의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갈등을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완화하고 국민통합을 달성할 수 있는 헌정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연합정치의 리더십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 주요내용

제도와 행위자의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 연구는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는 연구 방법을 채택하였다. 북유럽 사례연구를 통해 포퓰리즘 정당의 부상에 대응하는 정당 간의 연합정치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대통령제 하에서의 연합정치의 성과를 비교해 보았다. 이어서 민주화 이후 한국의 정당간 정책공조의 형성과 소멸과정을 추적하여 한국에서 초보적 형태의 정당간 연합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북유럽 국가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연정 구성 과정에서 포퓰리스트 정당이 참여하는 경우 이들의 급진성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전통적인 중도우파 연정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반면 포퓰리스트 우파정당의 인기가 높은 상황에서 극단주의 우파정당이 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소수정부가 등장하여 안정적인 정부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연합정치는 북유럽처럼 의회제를 채택한 국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통령제를 채택한 국가들을 분석한 결과 다당제 하에서 다수 정당의 연립정부가 수립된 사례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통령제와 다당제의 결합은 교착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우려와 달리 연립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책임성, 정치안정과 폭력의 부재, 정부규제의 질 등 민주적 거버넌스의 측면에서 단독정부보다 성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대안·시사점

한국의 헌정제도는 갈등해결형 제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민주화 이후 법인세 정책의 결정과정을 살펴보면 연합정치의 장애물이 많은 환경 속에서도 한국의 정당들은 정책연합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의회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연합정치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한국에서도 협력적인 연합정치가 활성화되어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가 개선되고 국민통합을 위한 민주적인 갈등관리가 정착될 것이다.

국민통합: 수요자 중심의 의제 형성을 위한 예비 검토

연구책임자 박상훈

□ 연구배경 및 목적

이 연구는 그간의 국민통합 관련 의제 구성에서 주변적으로 다뤄져 왔던 사회집단의 이야기를 다룬다. 초점 집단은 자살자 시민과 산재 사망 시민이다. 자살자 시민이 국민의 지위를 스스로 버린 사회집단이라 한다면, 산재 사망 시민은 원치 않는 사고나 질병으로 일할 권리와 함께 목숨을 잃은 사회집단이라 할 수 있다.

□ 주요내용

국민통합이란 질병과 빈곤, 재해와 범죄, 전쟁과 폭력과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삶을 보호함으로써, 개개인이 좀 더 자유롭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평화롭고 평등한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국가의 헌법적 의무’라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국민통합의 의제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는 집단 간 갈등이나 양극화, 불평등처럼 사회상태 전반을 통계적 상황으로 평균화해서 보여주는 것에 기초를 두었다. 나아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를 강조하고 그 대책으로 평균화된 통계 상황의 개선을 목표로 하는 예산과 제도, 기구의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 정책대안·시사점

이 연구는 첫째, 사회상태의 평균적 상황보다 그 구체성에 주목해 당사자 집단의 관점에서 국민통합 의제를 바라봐야 함을 강조했다. 둘째, 이를 통해 이념갈등, 노사갈등, 지역갈등과 같이 그간 국민통합의 중심 의제보다는 자살과 산재와 같이 주변화된 문제가 더 중요한 국민통합의 의제로 다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셋째, 자살자와 산재 사망자 집단을 대상화하는 것에 기초를 두고 “OECD 1위의 자살률, 산재 사망률 국가의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정책적 접근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글로벌 경제 패러다임 전환 연구: 미국의 경제정책과 중장기 성장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이선화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장기 경제성장과 그 결정요인에 대한 경제학계의 최신 이론적·실증적 논의를 소개하고 미래의 성장에 관한 장기적 전망을 제시한다. 코로나 이후 전개된 미국의 경제 및 재정정책이 지난 40여 년간의 시장중심주의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둘러싼 이론적 논의와 정책적 동향을 분석하였다.

□ 주요내용

세계 자본주의는 자유방임에 기초한 고전 자본주의, 케인스주의와 복지체제로 구성되는 수정 자본주의, 금융화·세계화·자유화 및 복지의 후퇴로 특징지어지는 신자유주의 질서로 전환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선진국 경제는 통화정책 중심에서 적극적 재정정책과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지지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컨센서스가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종식과 새로운 세계관에 기초한 전환기가 시작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보수적 견해가 주류를 이루던 과거와 달리 코로나 이후 세계경제는 재정 보수주의에서 탈피하여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지하는 방향으로의 컨센서스 변화가 진행되었다. 예컨대 경제위기와 같은 총수요 충격은 장기실업이나 기업의 신기술 투자 경로를 통해 이른바 이력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잠재산출과 장기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낮은 현실에서는 정부부채 비율 증가의 우려가 낮으며 사회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공공투자 확대가 성장과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IMF 등 주요 기관들은 유럽 재정위기 이후 긴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불황기와 제로금리 시기에는 재정승수가 높으며 공공투자의 성장효과도 높은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국, 총수요와 총공급을 통합적으로 고려할 때, 불황기에는 적극적 재정확장이 성장둔화를 막고 장기적 경제성장 촉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노력은 큰 정부와 재정정책의 귀환을 가져왔다. 선진국 정부들은 위기 국면에서 소득과 일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확장을 실시하였다.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용인하는 총수요 확장정책, 즉 고압경제(high pressure economy)에 대해서는 경기과

열과 인플레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밖에 독과점 규제와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글로벌 최저법인세 부과를 위한 국제적 합의 등은 자본과 노동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부자와 기업에 대한 증세를 통해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 정책대안·시사점

미국 정부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성공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미국의 경제 패러다임 전환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의 정책 전환에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글로벌 최저법인세 합의는 세계 각국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해 조세를 낮추는 '바닥으로의 경쟁'을 멈추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계 구축의 단초를 의미한다.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조세 수입을 확충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체제 구축은 우리나라가 '복지-조세-재정건전성'이라는 트릴레마에서 벗어나 적극적 복지국가 전략을 만들어 나감에 있어 긍정적 기회요인이 된다. 다만, 저출산·고령화의 속도, 노동이나 자본 등 요소시장의 경직성, 기축통화인 달러와 원화의 본질적 차이 등을 고려할 때, 미국 경제를 대상으로 한 정책 컨센서스가 한국 경제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회경제시스템 전개와 새로운 복지체제 구상

연구책임자 이선화

□ 연구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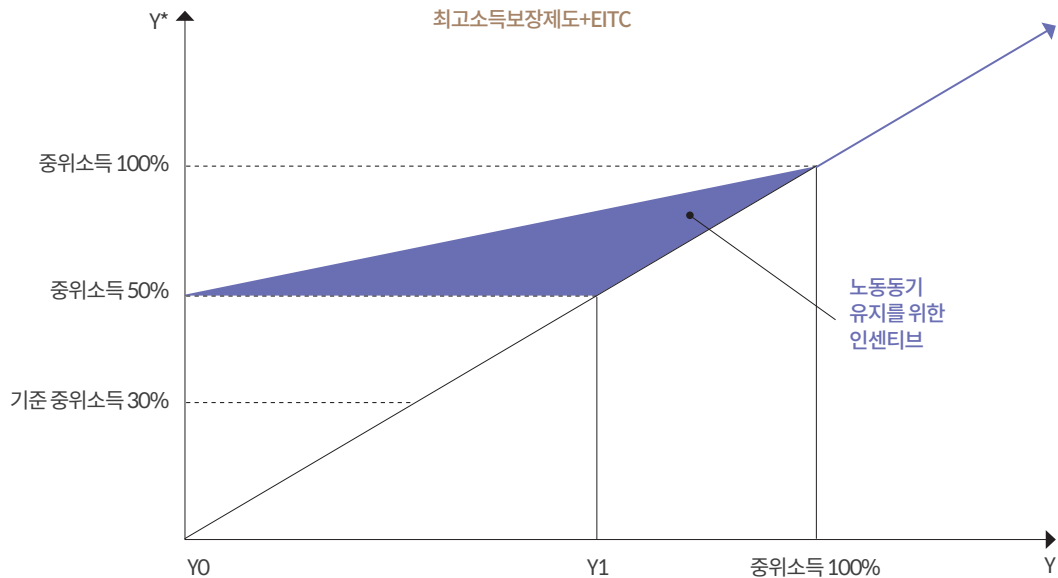
본 보고서는 특정한 복지체제는 국민경제의 경제구조(산업 및 고용 구조)와 조응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지속가능한 시스템으로 안착될 수 있다는 인식 틀에서 출발한다. 연구의 목적은, 성장이 모든 문제의 해법을 제공했던 개발국가 복지체제가 해체된 조건에서 사회경제 변화에 조응해 복지체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복지체제를 생산체제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특성과 구조, 기원과 진화 과정에 대해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를 위한 전략적 대안을 평가하였다.

□ 주요내용

한국 복지체제의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사회경제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을 성장체제, 고용체제, 자산체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성장 경로의 경우 전 세계적 인구 고령화와 장기 침체, 미국의 생산성 저하와 성장을 하락이 경제의 상방 성장 가능성을 제약하고 있다. 고용체제는 높은 정규직 고용보호와 낮은 실업보호라는 이중구조의 고착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하는 숙련의 양극화, 성장과 고용의 탈동조화로 요약된다. 자산체제에서는 소유자 중심 개발국가 모형의 특징이 확인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부담·저급여 외에 사회보험 중심의 국민부담률 상승, 공적 및 사적 보장체제의 이중구조라는 특성이 있다. 특히 제도화된 복지정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보장받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현상인 '역진적 선별성'을 특징으로 한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근대적 공공부조의 제도화와 사회보험의 확대는 역진적 선별성을 더욱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 정책대안·시사점

최소소득보장제도(중위소득 50%)와 EITC를 결합한 복지체제



본 연구에서는 복지체제를 규정하는 사회경제 시스템의 변화 요인을 확인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제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였다. 대안적 복지체제를 위한 첫 번째 대안으로는 최소소득보장제도에 근로장려세제(EITC)를 결합하여 기준선을 넘는 소득에 대해 중위소득 100%까지 5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제도를 제안하였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체제 수준의 보편주의가 제도의 주축을 이루고 공공부조로 이를 보완하는, 즉 복지체제의 전환을 통해 생산체제의 전환을 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두 번째 대안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공적 사회 보장제도를 고용관계에 기초한 제도에서 소득에 기초한 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전 국민 사회보험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별도의 소득보장제도(최소소득보장제도에 근로 동기 장치를 추가)를 적용하는 세부방안을 포함한다. 특히 복지체제의 변화를 통해 생산체제가 강화되는 선순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원활한 구조조정과 함께 인적자본의 고도화가 요구된다.

사회경제시스템 전환과 복지국가 유형별 대응체제 비교

연구책임자 이채정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연구는 복지국가 유형별로 영국(자유주의), 독일(조합주의), 스웨덴 및 핀란드(사민주의)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불평등 심화의 양상을 살펴보고 어떠한 정책적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 주요내용 및 정책대안·시사점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고령화 추이와 연금, 의료서비스, 돌봄 서비스 등의 제공에 있어서 제도적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금제도의 경우, 공통적으로 연금 지급의 원칙이나 노인 기준 연령 등을 조정하여 연금 수급 연령을 늦추고, 근로 이력 부족 등에 의해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구성원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변경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의료서비스는 국가의 공공책임성이 강력하게 작동하고 노인 이외의 인구집단도 정책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이 단행된 경우는 드물었다. 한편, 돌봄(요양)서비스는 일부 분석대상 국가에서는 서비스 전달체계를 규율하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등 일선 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 주체가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동시장 변화는 고용 실태와 각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국과 독일은 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가, 자영업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어떻게 포섭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수행방식이 조정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 체계를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은 플랫폼 경제의 확대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가 야기하는 복지체계에 대한 도전이 덜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스웨덴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실업률의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핀란드는 플랫폼 노동자의 증가에 따른 기존 복지체계의 대응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심화에 대한 개별 복지국가의 대응은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별로 우선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불평등 관련 논의를 소개하였다. 영국은 소득 불평등뿐만 아니라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이 세대 간 불평등의 문제와 상호작용하면서, 기존의 상속세와 자본이득세뿐만 아니라 부유세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진행 중이다. 독일은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으며, 부의 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어 최근 선거에서 조세개혁 논의의 필요성이 주요 정책의제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스웨덴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소득 불평등도가 낮은 국가에 해당하지만, 소득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격차는 점차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핀란드 역시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소득 상위 집단과 하위 집단의 격차가 점증하는 양태를 보이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의 증가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연구책임자 김유빈

□ 연구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속도의 빠른 근대화를 성취하였으나, 국가 성장의 이면에 개인과 사회는 분열과 갈등, 불공정과 양극화, 적대와 대립과 같은 사회문제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국가의 발전 목표를 위해 사회와 개인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시민과 시민의 대표가 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기획하고, 다르게 살아도 되고, 느리게 살아도 되는 다원주의 사회를 기반으로 한 '성숙사회'를 국가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주요내용 및 정책대안·시사점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는 한국 사회의 전환을 위한 국가 비전으로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을 제시하고, 그 지향 가치로서 '국가 주도에서 자율과 분권으로 발전하는 사회', '경제성장 중심에서 다원 가치 중심', '사회적 약자를 우선하는 따뜻한 공동체'로 설정하였다. 이상의 비전과 가치체계의 실현을 위해 '개인 역량 강화와 삶의 질', '더불어 사는 공동체', '패러다임 전환과 지속성장', '국내외 갈등 조정과 협력'의 4대 중점목표 아래, 12개의 중장기 아젠더를 최종 제안하였다. 성숙사회 비전과 아젠더의 실현을 통해 먼저 개인은 다양한 삶의 가치와 방식을 존중받고,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존중받으며 사회적 관계 맺음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사회는 불평등과 격차의 완화 속에서 다양한 연대와 공동체 기반의 사회적 대화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과학기술-환경-인간의 '공존'과 질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으로 국가는 새로운 혁신 동력을 창출할 것이다. 정치는 신뢰 회복을 통해 사회 통합을 실현하고, 신형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균형 외교의 추진 속에 독자적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가며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비전 2037은 위로부터의 기획이 아닌, 국민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의 성찰과 전망을 통해 향후 15년을 바라보는 국가와 국민의 '공동 약속'을 제시하였다. 이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당, 행정부처 등 정치적 대표, 노사와 지역 등 사회적 대표, 계층, 연령, 성별, 직업 등에 따른 국민의 대표 등이 참여하고 논의하여, 합의된 사항은 관련된 법과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책 집행 과정에 활용하고, 개인, 사회, 국가 차원의 실천 전략으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회는 서로 다른 정견과 가치, 이념, 이익이 다투고 경합하며 사회적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협의·조정함으로써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오래 가는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개인 권리와 국가의 역할을 정치의 방법으로 통합해내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역할이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의 전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 아젠더를 긴 안목으로 살피고 방향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국회의 미래 의제 설정 및 국정 기획 능력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2021년 국회미래연구원의 중점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과제의 일환으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통해 수행됨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한국의 전략

연구책임자 박성준

□ 연구배경 및 목적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공급망 재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른바 미중 기술패권경쟁으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및 경쟁은 외교와 경제를 모두 포함하는 국제질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두 강대국 모두와 정치적,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이러한 국제정세에 큰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흐름과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본 연구의 분석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먼저, 글로벌 가치사슬과 첨단기술산업을 중심으로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산업 고도화, 미중 간 기술격차의 축소 등을 분석하는 한편, 미중 갈등의 심화 및 공급망 재편으로 인한 앞으로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다음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외교전략을 분석하였는데, 미국은 기술·이념·안보를 연계하여 중국을 고립시키고 기술격차의 유지 및 확대를 추구하는 양상을 보이고, 중국은 제3세계 국가들과의 기술연대와 협력을 추진하고 중국식 혁신 모델과 거버넌스 모델의 확산을 추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 분야 10개를 선정하여 이를 다시 기술경쟁(반도체, 그린테크, 백신), 플랫폼 경쟁(AI, 데이터, 이커머스·핀테크, 미디어·콘텐츠), 지정학 경쟁(5G 통신장비, 우주, 밀리테크)의 세 범주로 분류한 뒤 각 범주와 분야별로 핵심이 되는 기술적 사항, 상호의존성, 경쟁 및 견제의 양상, 전망 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였다.

□ 정책대안·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의 정책적 시사점을 각각 도출하였다. 정부에 대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기술 및 생산 질서의 구조적 공백을 공략, ② 중국에 대한 의존도 완화 및 포용적 한중관계 추구, ③ 미국의 기술적 우위가 명확한 분야에서는 한미협력 수준을 향상, ④ 신기술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 참여, ⑤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추진 체계 정비. 국회의 역할에 대한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① 국가전략의 목표와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 기반 조성, ② 첨단기술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에서 다차원적 외교의 한 축을 담당, ③ 장기적 관점에서 미래지향적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발굴.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 세계의 전략과 한국외교에의 제언

연구책임자 차정미

□ 연구배경 및 목적

4차산업혁명시대 기술 혁신과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오늘날, 기술은 미중 양국의 전략경쟁과 미래 질서 리더십 경쟁의 핵심 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세계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초래할 기술냉전(tech cold war), 기술균열(tech divide)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자국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저마다의 전략적 방향과 대응을 고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유수의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세계 주요국의 외교전략과 의회의 역할을 비교연구하여 한국 외교에의 함의와 의회외교에의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미중 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세계의 인식은 패권경쟁의 장기화 가능성에 공감하면서도 기술경제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디커플링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독일, 호주, EU, 아세안, 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등 13개 국가와 지역을 비교 분석한 결과 대다수 국익극대화를 위한 실리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각국의 기술수준과 대미, 대중 외교관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서로 다른 입장과 전략적 방향을 견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독일, 호주, 일본, EU 등 상대적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춘 대미 동맹국들은 경제안보와 기술주권 강화 목표로 기술혁신에 주력하면서, 기술과 무역 대외의존도를 낮추고 외교다변화를 모색하였고,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중국에 대한 기술의존도가 증대하면서도 한편으로 미국 유럽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헤징을 추구하였다.

□ 정책대안·시사점

세계주요국/대륙의 미중 기술패권경쟁 인식과 전략 비교분석표



한국외교에의 시사점으로 ①혁신선도 미래 국가전략 구상 ②기술안보 연계 속에서 세계의 흐름에 대한 정보 역량 강화 ③개방형 기술주권의 추구 ④과학기술외교 다변화와 다자적 접근 강화 ⑤중장기 미래 기술안보, 경제안보 전략수립과 거버넌스의 구축 ⑥글로벌 연대강화와 중견국 협력 주도 ⑦디지털 시대 규범과 표준 주도 위한 기술력, 외교력 확대 ⑧개발도상국 외교의 중요성과 한국의 제3외교 전략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의회역할 제언과 관련 <혁신경쟁 시대 글로벌 혁신리더>와 <개방적 기술주권의 추구>를 2대 전략목표로 제시하고, 7대 핵심과제로 ①기술혁신, 기술안보 뒷받침할 의회 역할 강화 ②한국형 혁신경쟁법 설계 ③기술안보, 경제안보 대응 위한 중장기 구상과 입법 강화 ④의회 차원의 중장기 글로벌 연대전략 구상 ⑤규범과 가치 주도 위한 의회의 역할과 공공외교 확대 ⑥의회차원의 개발도상국 외교 활성화 ⑦혁신경쟁법 등 설계, 입법위한 미래전략특위 신설 등을 제시하였다.

The Future of US-China Tech Competition

Global Perceptions, Prospects, and Strategies

연구책임자 차정미

□ 연구배경 및 목적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의 심화, 특히 신기술 주도권을 둘러싼 전략경쟁의 심화는 단순히 미중 양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이슈이다. 또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미중 양대 강국의 전략과 관계 뿐만 아니라 세계 국가들의 인식과 전략이 주요한 요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이 미중 양국의 담론과 전략에 편중되고, 기타 세계 국가들의 다양한 인식과 전략에는 주목하지 않아 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세계 주요국들의 해외 학자들과 함께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미래에 대한 세계 주요국들의 인식과 전략을 비교연구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세계 인식의 지형과 이를 토대로 한 글로벌 협력과 한국 외교전략의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본 연구는 글로벌 공동연구로 세계 12개국의 13명의 해외학자들이 참여하여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호주, 독일, 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중남미, 아세안, 중동 등 세계의 미중기술패권경쟁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공유하고, 글로벌 협력의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였다. 세계 각국은 각자의 경제적 외교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인식과 대응을 하고 있으나, 공통된 핵심 담론- 기술주권과 디지털화(디지털발전), 그리고 다변화-이 존재하였다. 미중 기술패권경쟁으로 인한 경제적 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독일, 싱가포르, 호주 등 중견국들이 정직한 매개자(honest broker), 중재자의 역할을 모색하면서 중견국들간 협력의 공간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 정책대안·시사점

세계 주요국의 학자들이 참여한 글로벌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 외교전략적 방향과 글로벌 협력에 있어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었다. 글로벌 기술주도 경쟁, 혁신경쟁이 심화되는 환경 속에서 한국 또한 첨단기술 경쟁우위를 위한 정책에 주력하면서도 미중 기술패권경쟁 속에서 한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역할의 확대를 위해 외교의 다변화와 가치규범주도 외교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중견국으로서 글로벌 협력을 주도하고, 세계 국가들과의 연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대외정책과 의회의 역할: 해외사례 비교 연구

연구책임자 박현석

□ 연구배경 및 목적

국제적 금융위기, 테러리즘, 기후 및 환경문제 등 새로운 국제적 도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국제 이슈가 국내 정치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안보중심의 대외정책이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대외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이 재정립되고 있다. 우리는 미국, 독일, 핀란드, 일본, 유럽의회의 사례를 통해 대외정책에서 의회의 역할이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 주요내용

미국의 경우 1970년대 의회개혁을 통해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베트남전 등 행정부의 무리한 대외정책에 개입하기 위한 전쟁권한법이 통과되어 의회의 역할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9·11 테러 이후 안보환경의 변화로 안보사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해지면서 행정부 대외정책에 대한 미국 의회의 통제력이 약화되었다. 미국 의회는 안보정책과 달리 경제제재, 해외원조, 통상 등 대외경제정책의 영역에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독일과 핀란드의 경우 유럽연합이 출범하면서 의회가 적극적인 유럽정책의 형성자로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유럽연합 문제는 대외정책이지만 국내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사항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의회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는 러시아와 접경하여 안보위협이 상존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대외정책은 대통령이 주도해 왔으나 냉전의 종식과 의회제로의 정치개혁 이후 의회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일본의 의회와 유럽 의회가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한적이다. 하지만 정책 형성의 초기부터 의회가 보다 많은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제정하는 등 정보접근 권한을 확대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해 자문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의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 정책대안·시사점

전환기 국제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국의 의회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사후 승인에서 대외정책의 형성과정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한국도 대외정책 영역에서 국회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대북정책 등 논쟁적 대외정책에 대해 여야가 정책수립과정에 동참하여 지속가능한 중장기 국가 안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평화과정과 의회의 역할: 해외사례와 국회에 대한 함의

연구책임자 김태경

□ 연구배경 및 목적

한국전쟁의 정전으로부터 70여 년이 흐른 현재, 2018년 평창 ‘평화올림픽’ 이후 재개된 한반도 평화과정과 남북 관계는 다시금 정체되었다. 2018년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초석이라 할 북한의 새로운 핵 · (ICBM)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모라토리엄은 2019년 초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당사자들 간 합의 불발에 따라 현재 그 효과가 무색한 상태다. 본 연구는 이렇듯 지난하고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구축(peacebuilding)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문제의식에 바탕해, 평화과정에 대한 갈등당사자들의 폭넓은 참여를 통한 협의주의적 해결, 민주적 공론을 통한 정당성 확립, 미래 세대를 포괄하는 다양한 계층, 집단들을 유념한 평화 · 통합 정책 발굴에서 의회의 역할에 주목했다.

□ 주요내용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국회의 역할을 탐색하면서, 본 연구는 우선 지속가능한 평화를 위한 평화구축 과제의 성격과 다양한 사례 분석과 관련해 비교 평화과정 연구, 분쟁, 갈등의 평화, 통합으로의 전환을 위한 연방주의, 협의주의 등의 이론적 시각을 검토했다. 또한 남북 국회회담의 역사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합의 담론과 실천에서 국회의 위상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과정에서 국회의 역할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비교적 관점에서 양안관계, 아일랜드 평화과정, 독일-프랑스 화해협력의 세 가지 해외사례를 특히 의회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탈냉전기 민의대표 교류 등 경제 · 사회적 교류 증진에 따른 기능주의적 협력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정치군사적 문제의 미해결, 특히 최근 미중 전략경쟁 심화와 대만 국내정치 양극화,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입장 강화 등으로 악화된 양안관계 사례는 한반도에서 평화의 제도화의 중요성을 확인시킨다. 평화의 제도화에서 협의주의적 평화정책의 모델인 아일랜드섬 사례는 또한 협정 체결 이후의 평화구축이라는 장기적 과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 만들기에서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독일-프랑스 화해협력 사례는 초국가적 제도화의 점진적, 장기적 과정으로서 유럽통합이라는 광범한 맥락을 바탕으로, 2019년 양국 ‘의회협정’에 근거해 입법부 간 상시협력, 이를 통해 양국의 유럽정책, 외교정책 공동보조 강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행정부만이 아닌 의회 채널을 통한 긴밀한 소통 · 협력, 안정성 및 정당성 제고와 관련해 중요한 참고가 된다.

□ 정책대안·시사점

본 연구는 협의주의, 연방주의의 이론적 논의,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진전과 퇴행을 반복하는 한반도 평화과정에 대한 국회의 독자적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대안적 방향을 도출했다. 우선 국회는 한반도 평화·통합의 중장기적 시야에서 한반도 평화과정의 모든 갈등당사자들을 협상 테이블에 포괄하는 협의주의적 원칙을 확립함으로써 한반도, 한국 사회의 다양한 분열, 대립이 민주적 공론장에서 소통, 논쟁되는 공간으로서 기능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한반도 평화과정에 정당성, 안정성을 중장기적으로 부여하는 입법기관으로서 남북 합의서, 국내법 검토 및 수정을 통해 평화과정의 제도화에 기여해야 한다. 셋째, 국회는 정책적 차원에서 전더, 접경, 지방 등 한국 사회의 폭넓은 주제적 참여를 촉진하고 청소년 교육, 문화, 환경 등 다양한 시민사회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평화·통합을 위한 준비에 투자해야 한다.

평화과정에서 의회의 역할: 한반도에의 함의

양안관계		아일랜드 평화과정	독일-프랑스 화해협력
긍정	탈냉전기 다양한 경제·사회·문화 교류협력의 활성화	- 협의주의적 제도화 - 사람간 사람의 평화프로세스 (신뢰축적의 과정)	유럽통합의 역사적 맥락에서 화해·협력의 제도화 (통합 초기 공동체의 초국적 설계)
주요 특징	- 민교류 주체 간 비대칭성 - 대만 국민정체성 변화 및 국내정치적 분열 대립 - 홍콩 시위 등에 대한 중국 강경 대응 및 중국의 평화통일 정책 변화	- 제도화 이후 역전의 존재 - 양극단 정당의 권력공유에 따른 교착, 퇴행 가능성	브렉시트와 같은 유럽통합의 최근 위협에 대한 반응으로서 독-프 양국 협력
한반도에의 비교적 함의	‘두개의 정부’ 간 정치체제 차이 (대만 국내정치 및 양안관계의)제로섬적 성격 - 미중 전략경쟁의 국제환경적 영향	- 협의주의적 모델에 따른 평화 구축의 제도화 - 외부의 정직한 중재자의 존재 - 평화과정의 역진에도 불구하고 평화과정 자체에 대한 신뢰 존재	- 양국 의회협력의 더 큰 맥락으로서의 유럽통합의 초국적 설계와 제도화 - 정책적 차원의 협력 의제 및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등 미래세대 접경지역 소도시 등 교류협력)

Climate Change and International Politics: U.S.-China relations and International climate cooperation

연구책임자 조해인

□ 연구배경 및 목적

기후변화는 전 지구적 문제로서,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과 중국의 행보는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질서를 정비하는 데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바라보는 국제적 시선과 그에 따른 국가별 국제협력 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전략도 제언했다.

□ 주요내용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주변 국가 중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 상위 9위권에 속하는 인도, 러시아, 인도네시아, 유럽연합을 선정해 조사했다. 조사 대상 국가 모두 미국과 중국의 기후변화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더욱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선진국 그룹을 대표하는 미국과 개발도상국 그룹을 대표하는 중국 간의 논의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책임분담을 둘러싼 갈등 해결의 돌파구가 될 것임에 기대가 컸다. 그리고, 저탄소 경제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기후변화 국제협력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별 국제협력 추진 계획과 방향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국가 모두 미국, 중국과 양자 또는 다자 기후변화 협력 활성화 방안을 모색 및 추진하고 있었다. 유럽은 미국, 중국과친환경적인 무역체제를 세우기 위한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고, 중국과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로 협력하고 있다. 인도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 감축 노력과 계획을 언급하며, 세 국가 간 기후 정의, 공정한 전환을 달성하기 위한 논의와 협력을 강조했다. 인도네시아는 중국을 롤모델로 삼아 지속적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을 함께 달성할 방안을 모색 중이며, 양자, 남남(South-South), 다자간 협력 장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단계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구도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자 간 협력의 의도는 분명히 있음을 설명했고, UN, G20, BRICS 등의 다자간 협력을 활용해 기후변화 국제적 논의에 적극적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 또한 온실가스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해왔다.

□ 정책대안·시사점

미국과 중국 간 기후변화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 속에서 한국은 다자간 정부 간 협의체나 국제기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국제협력에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 대응으로 무역체제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은 미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 협력 구도를 형성해 기후변화와 무역 규정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미중 기술패권경쟁과 한국경제

연구책임자 박성준

□ 연구배경 및 목적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경제적 패권경쟁을 넘어서 이념과 체제의 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다자주의 통상체제가 무력화되고,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디커플링(탈동조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국제무역질서의 변화를 살펴보는 한편,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디커플링 양상을 각각 국가, 산업, 기업의 수준에서 분석하고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주요내용

본 연구는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미국과 중국 간 갈등 및 경쟁의 심화에 따른 산업정책 및 국제무역환경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첨단기술 산업 전반에서의 경쟁 및 디커플링 양상과 전망을 양국의 정책과 전략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이어서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핵심 분야인 반도체와 AI 산업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 및 디커플링의 양상과 전망을 더욱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미중 기술패권경쟁이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개별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을 국가, 산업, 기업 수준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국제통상환경의 변화가 다양한 경제주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국가 단위의 전략과 기업(또는 산업)의 상호작용 및 이해 충돌을 살펴봄으로써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디커플링의 실현 가능성을 재차 검토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정책대안·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첨단기술 산업에서 한국의 기업이 기술적인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우리나라 공급망의 취약성을 파악하고 국제적인 협력대상 다변화 및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기술과 업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통상 협정 및 글로벌 협력체제 구축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넷째, 경제안보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조직을 신설하여 기술협력, 공급망 안정 관련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범정부적 공급망 대처 태스크포스(TF)나 일본의 경제안보상 등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1차조사) 기초분석 보고서

연구책임자 허종호

□ 연구배경 및 목적

행복은 미래사회의 핵심 키워드이다. 해외 선진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물질적 부를 목표로 했던 개발성장의 시대에서 질 높은 삶과 좋은 사회로 국민적 요구가 증가하였다. 행복이 양질의 삶, 좋은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이를 국가적 차원에서 측정 및 관리하고자 하는 노력을 각 국가 단위와 국제기구에서 활발히 진행하였다.

□ 주요내용

한국은 높은 경제 수준에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 수준을 보이는 대표적인 나라(160여 개국 중 50위: World Happiness Report 2021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국가 내 행복 격차도 큰 나라이다. 그럼에도 행복에 대한 심층 연구와 정책적 대안 제시를 위한 기초자료가 희박하다.

이에 국회미래연구원에서는 「한국인의 행복조사」연구를 통해 ① 한국인의 행복 수준 및 불평등 크기를 추적하고, ② 다양한 사회 현상을 예측하며 ③ 행복 수준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다양한 결정요인을 밝히고, ④ 국민 행복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발굴하고자 기관 설립 초기부터 노력하여 왔다. 본 보고서는 2021년 수행한 1차 조사에 대한 기초분석 보고서로, 조사의 개요 및 2021년 기준 대한민국 8천 가구 대상 만15세 이상의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 부분, 정서 부분, 삶의 만족도, 사회심리적 변인, 일상재구성 문항, 코로나 관련 조사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의 수치와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 정책대안·시사점

본 보고서는 국민의 행복 수준을 밝히면서 현재 우리 사회의 특징 및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아울러, 국회 입장에서 행복 수준과 불평등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수행과 더불어 국가 중장기 정책 수립 및 실시의 기초 자료가 되며, 그 실효성의 판단과 평가에서도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다.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및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연구 심층분석 보고서

연구책임자 허종호

□ 연구배경 및 목적

본 보고서는 20년에 전국적으로 수집된 「한국인의 행복조사(예비조사)」 및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술적인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①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검증 및 ② 데이터의 효용성 검증에 중점을 두었다.

□ 주요내용

본 보고서의 작성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본 보고서는 특정 주제 또는 방법론 등에 국한된 분석을 하지 않고 「한국인의 행복조사(예비조사)」 및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로 생산된 설문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각 분야의 전문가들 약 30여 명을 섭외하여 주제별로 엄밀한 학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 정책대안·시사점

해당 주제는 사회경제적 결정요인, 일상의 사회화, 사회적 자본, 사회환경, 직업, 여가, 세대, 지역, 코로나19 등 행복과 연관된 주제로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론적으로 각 영역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행복도를 높이고 하위 집단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제안하였다.

미래정책의 국민선호 연구

연구책임자 박성원

□ 연구배경 및 목적

미래정책의 국민선호연구는 국회미래연구원이 국민과 함께 미래연구를 수행하는 연구 프로젝트이다. 미래연구는 국민의 일상에서, 국민의 참여로 완성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사회에서 누적된 갈등과 문제를 미래의 시점에서 예측해보고 필요한 정책적 대응을 논의하는 데에도 이 연구는 중요하다.

□ 주요내용

올해 연구는 15년 앞의 다양한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 100여명의 전문가 조사, 전국 3000명의 설문조사, 202명의 국민 숙의토론형 공론조사를 통해 ‘성장의 시대’에서 ‘성숙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는 저성장의 시대를 성장의 관점에서만 불안하게 볼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성숙의 시대로 진입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 정책대안·시사점

성숙의 시대는 국민 개개인이 자립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공동체의 등장, 소수와 약자를 먼저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 국가 주도가 아닌 자율과 분권으로 움직이는 나라, 경제성장중심에서 사회적 가치와 환경적 가치 등 다원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이다. 이는 기존의 성장시대에서 고착된 사회의 다양한 구조와 제도에 일대 변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민보경

□ 연구배경 및 목적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미래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가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미래대응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지표체계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모니터링 방안을 제안하였다.

□ 주요내용

먼저 미래사회 대응지표의 기준으로 ‘미래 적합성’, ‘측정가능성’, ‘시계열자료’, ‘타당성’, ‘신뢰성’ 등을 도출하였다. 여기에 지표의 과학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요인’, ‘직접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요인’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미래사회 대응지표 선정 기준

기준	의미
미래 적합성	- 미래사회 관련 의미를 가지는 지표(미래비전, 미래 전략과의 연계성 확보) - 미래사회 이미지와 그 미래상을 정의하는 목표, 전략에 의해 이끌어질 수 있는 지표 - 현재 시점보다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더욱 의미를 가지는 지표
측정가능성	-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생산, 수집된 데이터 사용 -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조사하거나 측정하여 수치로 표현할 수 있는 지표
시계열 자료	- 일정기간 동안의 변화추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를 확보 가능한 지표 - 미래사회 모니터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표
타당성	- 수집된 자료의 과학적 측정의 정도, 지표의 증명 정도 및 재생산 정도가 높아야 함. - 전문가나 일반인이 신뢰할 만한 자료를 생산하기 위한 엄격한 방법론의 적용이 요구됨.
신뢰성	반복측정에서도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높은 신뢰성을 갖고 있어야 함.
과학성	- 이론적으로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요인 - 직접적으로 정책적 개입이 가능한 요인 (유사 지표들의 경우 정책적 개입에 의해 해결이 가능한 지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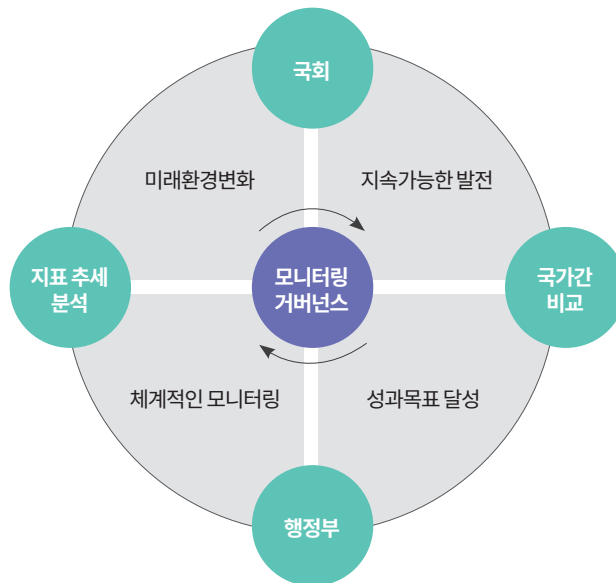
이러한 기준에 근거하여 전문가 자문, 설문조사(AHP) 등을 통해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발굴하였으며, 미래 비전, 전략과 연계하여 미래사회 대응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미래비전-핵심전략-모니터링 지표 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관련 정부 중장기계획의 목표와 실제성과를 비교하는 미래 정책 모니터링과 합리적 예산배분을 위해 예산조정과정에서 지표를 활용한 체계적인 정책대안 우선순위 검토를 제안하였다.

□ 정책대안·시사점

본 연구는 미래사회 대응능력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행정부 등의 역할과 거버넌스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회는 행정부의 미래 대비 역량을 진단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정부정책에 대한 전문가적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연구 방법론 구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모니터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4.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1)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호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작성자 민보경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호는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세대의 가치관을 확인하고 향후 발생할 이슈와 미래 한국 사회를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대부분은 미래는 희망적이지만 개인의 행복은 지금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했으며 고령층과 저소득층에서는 미래에 대한 희망적 평가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미래에는 지금보다 공정성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였으나 갈등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해 미래 갈등관리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제11호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작성자 성문주

이 보고서는 개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심리상태인 '심리자본'과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어 개인 또는 공공의 이익이 되는 무형 자본인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한 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현 수준을 진단한 결과, 두 자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특히, 회복탄력성과 참여 및 네트워크, 공적신뢰 수준이 낮게 나타나 이들의 유의미한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층의 경우,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 강화도 대두됐다.

제12호

코로나19와 함께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작성자 허종호

이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해 전국 15세 이상 남녀 1만 4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국인의 행복조사」 설문 내 코로나 관련 응답을 시행한 것을 바탕으로 도출한 것으로, 코로나19 이후 한국인의 변화를 ‘일자리 및 소득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방역 관련 가치 인식과 실천의 변화’, ‘건강의 변화’로 나누어 살펴봤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중심의 피해를 실증적으로 밝혔으며, 특히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확대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우려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정책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생산하고 이에 기반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제13호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작성자 박성준

본 연구는 전 세계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코드화하여 제공하는 빅데이터 서비스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를 활용하여 최근 한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 간 발생한 두 가지 무역분쟁 사례(THAAD 사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소재 수출 제한 조치)를 살펴보았다. GDELT에 나타난 언론 기사의 어조(tone), 국가 간 협력 및 분쟁의 빈도를 활용하여 살펴본 결과 외교적·정치적 갈등이 무역분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위의 두 사례에서 무역이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통해 국가 간 갈등의 양상을 시계열화하여 보다 직관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 및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작성자 정 훈

기후변화 가속화로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에 동참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에너지 전환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 속에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제적인 요구 수준에 비해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세계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평가하는 글로벌 지수를 기반으로 국내 에너지전환 정책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해외 주요국 사례 비교를 통해 향후 국내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글로벌 에너지 정책 평가 지수인 에너지전환 지수와 에너지 트릴레마 지수의 2020년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각각 48위, 31위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글로벌 지수 결과와, 독일, 영국, 프랑스 세부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국가별 사회경제 시스템과 상황에 맞는 에너지 정책 경로를 결정해야 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수립과 관련법 제정 및 정책 반영을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 및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 이행과정 평가 및 환류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제15호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작성자 여영준

본 보고서에서는, 정량적 연구와 정성적 연구를 결합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의 진화패턴, 제도적 경로의존성에 대한 이해를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문제 및 정책혁신과제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에,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기반 정량 분석과 FGI 기반 정성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체계 상 주요 정책문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었다: ① 낮은 자율성에 따른 미래 정책환경 변화 적응 관리 한계, ② 정권별 키워드 단절 현상 심화와 정책추진 연속성 보장 한계, ③ 부처 및 조직간 조정 한계에 따른 정책간 정합성 확보 한계, ④ 증거 기반 정책결정 제약에 따른 계획 타당성 확보 한계, ⑤ 백화점식 계획 추진에 따른 개별 계획 실효성 저하 등.

도출한 주요 정책문제를 바탕으로, 미래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부문 중장기 전략 수립·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10대 정책혁신과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주요 혁신과제는 국가 중장기 비전 및 발전전략과 계획간 상호정합성 확보, 계획 수립절차 타당성에 대한 체계적 정보 제공, 부처간 협업 거버넌스에 대한 체계적 고려 등을 포함한다.

제16호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작성자 이선화

이 보고서는 국회미래연구원의 「국가장기발전전략 연구시리즈」(이하 「전략연구시리즈」)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전략연구시리즈」는 우리나라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풀어야 할 구조적 문제에 대해 국가운영시스템의 시각에서 종합적 해법을 모색한 결과물로서 총론·거버넌스·삶의질·혁신성장·노동 등 5권의 연구보고서로 구성된다.

「전략연구시리즈」는 발전전략 달성에 있어 거버넌스의 중요성, 기존 제도의 경로의존성, 제도 부문간 상호의존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신제도주의 접근법을 취한다. 거버넌스 개혁은 국가전략에 있어 정치제도와 전달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경로의존성과 상호의존성은 특정 제도에 대한 기득권 집단의 존재와 제도의 부문간 연계성으로 인해 한번 정착한 제도가 쉽게 바뀌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국가장기발전전략의 최종 목적은 국가비전의 제시와 더불어 기존 제도의 관성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의제를 제안하는 것이며 실효성 있는 국가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삶의 질, 성장동력, 노동체제 등 국가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문별로 대한민국 압축성장의 명과 암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전략연구시리즈」는 국가장기발전전략을 위한 분야별 개혁의제로는 정책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발전전략 추진, 관료제의 역할 재정립, 분권형 의사결정 및 정부정책 전달체계의 구축, 국회의 의사결정 기능 강화를 도출하였다.

제17호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작성자 허중호

지난 2020년 11월, 「한국인의 행복조사」를 통해 국민의 행복 실태를 분석하여 코로나 상황에서도 평균적인 전반적 행복감은 중간 이상을 기록했지만 60대 이상, 1인 가구, 교육 및 수입 수준이 낮은 집단, 건강상태가 나쁜 집단 등 행복 취약계층이 존재하여 불평등이 주요한 문제임을 확인했다.

이 보고서는 지역, 연령, 사회경제적 위치 등에 따른 행복의 불평등을 확인하고 이에 기초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노인, 1인 가구, 저소득층, 경북과 제주 등 지역민을 포함해 행복에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모색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제18호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작성자 조인영

이 보고서는 입법부 기능개선과 관련, 국회의 현황과 문제점을 국가비교연구 및 게임이론적 접근을 통해 설명하고 이의 원인을 현 제도배열의 부조화로 인식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한국 민주주의가 합의제보다는 다수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하는 국회’로의 유도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더라도 다수제 민주주의와 잘 조응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을 수 있으며 국회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가 궁극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서로 상충되는 제도 개혁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근본적이고 상보성을 높이는 제도적 배열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제19호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작성자 이채정

본 보고서는 사회정책 수행에서의 국가 개입 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 측면에서 OECD 회원국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을 유형화하고, 2019년과 2045년 기준 지역별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공급이 지역별 영유아 인구 분포와 균형을 이루는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OECD 회원국에 대한 유형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나친 시장의존형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수요-공급 격차 분석을 통하여 현행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제공기관을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재배열할 것인가를 검토하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의 수요-공급 균형 달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였다.

제20호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작성자 김현곤

이 보고서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와 경제사회 난제 해결에 대응하기 위해 평생건강, 평생학습, 평생직업을 핵심축으로 하는 국민주도의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을 제시했다.

지금까지의 국가발전모델의 한계점은 국정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국가, 정부의 관점 중심이었으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 사회구성원들의 관점이 반영된 국가발전모델은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목표 이미지, 국가 차원의 지향점을 향한 방향타, 국가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기준 등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주장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국가발전모델의 중요성과 역할 및 역사적 흐름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새롭게 제안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비전 및 국가미래상으로 ‘국민 모두가 꿈꾸고 꿈을 이루는 나라, 5천만 개의 꿈이 있는 사회’를 제안했다.

제21호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작성자 박성원

최근 3년 동안 발표된 미래의 인식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우리사회가 국가성장과 개인성장, 경제성장과 환경보존, 효율성과 형평성에서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지금까지 한국은 국가성장, 경제성장, 효율성과 능력주의를 중시했지만 최근 개인성장, 환경보존,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비전과 실천의 대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본 연구는 우리 사회의 누적된 갈등을 다차원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국민 선호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우회로 전략을 제시했다. 그 대안은 우리사회가 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할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이자 중간 기착지로 해석할 수 있으며 선호미래로 가는 가파른 지름길보다 비록 시간이 걸리지만 완만한 길도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제22호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작성자 박상훈, 이상직

본 연구는 지난 2004년부터 보건복지부를 주축으로 한 제1차 자살예방 5개년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자살예방을 위한 여러 정책이 시행됐지만 큰 효과를 얻지 못한 것에 대해 자살방지와 자살위험 억제에 초점을 둔 기존 접근의 문제점이자 한계라고 지적했다. 자살자를 사회 부적응자로 취급하거나 자살을 막지 못한 유가족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는 것도 잘못임을 설명하며 기존의 상식화된 접근과 안이한 행정적 접근 방식에 대해 개선 요구했다.

연구진은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사회적 제도는 물론이고 누구보다 큰 아픔을 겪는 유가족·사별자에 대한 정책도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국가나 사회가 개입할 지점을 찾아내고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 법 개정, 제도 정비 및 연구와 조사, 기획과 실무 등 여러 차원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자살률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23호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작성자 김유빈

이 보고서는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의 정의에 기반해 대량의 문헌 데이터 속에서 정의와 유사한 패턴을 갖는 이슈 후보를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전문가 편향성, 다학제적 관련 정보의 폭증으로 여러 관점의 이슈를 발굴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던 기존의 연구방법(전문가 의견 청취, 인터뷰, 브레인스토밍 등)을 벗어나 대량의 문헌 정보를 활용해 과학기술 및 인문사회를 포괄한 이슈 후보를 탐색하는 방법론을 도출했다. 문헌을 기반으로 신규성(Novelty), 확장성(Fast growth), 타분야 파급효과(Impact)를 고려하여 이머징 이슈를 정의하고 대량의 문헌 속에서 이머징 이슈 후보군을 신속히 도출해주는 알고리즘을 제시했으며 디지털 전환 사례에 제안 알고리즘을 적용한 결과 ICT 기반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문해력,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변화 적응, 새로운 기회 등과 관련된 다양한 관점의 키워드들이 도출됐다.

제24호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작성자 전 준

본 연구는 재난과 혁신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으로 살펴보고 미래 시나리오로 '재난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미래', '재난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미래', '재난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진 미래'를 제시했다.

미래 속 넓은 의미의 사회적인 위기와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혁신의 방법으로는 '민주적인 혁신'과 '유연한 혁신'을 제안했다. 일상적인 재난을 마주하고 있는 개개인이 혁신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에 발언권을 갖도록 하고, 혁신 주체를 다변화하고 위기 상황에서의 사회적, 조직적 탄력성을 중요시하는 혁신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

제25호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작성자 민보경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여건 만족도를 검토하고, 지역적 관점에서 도시와 비도시 지역 간 행복요인이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국회미래연구원의 2020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자료(15세 이상 전국 남녀 대상, 표본 수 13,824명)를 활용했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고자 응답자의 거주 지역을 통계청 기준에 근거하여 행정구역에 따른 도시와 비도시로 구분하였으며 분석 결과, 도시 지역에서는 '건강'과 '여가' 생활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비도시 지역에서는 '경제적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보경 부연구위원은 지역은 인간의 실질적인 삶을 영위하는 밀접한 변수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지역의 정주여건과 그에 대한 만족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지역의 여건과 정책 수요를 고려하여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행복 제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26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작성자 성문주

이 보고서는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부 중장기계획 중 고용 및 평생학습 영역의 전직지원서비스 정책에 대한 이슈 도출 및 관련 중장기계획 메타평가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해당 정책 이슈로 재취업 일자리의 수준(질적수준, 다양성, 지속가능성)에 관한 이슈, 정책 간 상호연계성 부족 및 정책 거버넌스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효과성에 관한 이슈, 전직지원서비스의 수도권과 지방 간 접근성 격차 이슈 등 총 4가지를 도출하였으며 정부가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중장기계획들을 수립·추진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고령사회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지,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환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제27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작성자 여영준, 조해인, 정 훈

연구진은 환경산업연관표(EEIO) 분석 모형을 활용해, EU CBAM 도입에 대응한 중장기전략 수립에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탄소국경조정 도입 확대에 따른 대응전략으로 국제 탄소국경조정 등 해외정책 동향 모니터링 체계 및 관련 거버넌스 확립, 탄소국경조정 도입에 따른 취약산업 보호와 지원, 생산공정의 구조적 전환을 통한 에너지효율향상 도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저탄소 에너지공급체계 개편 촉진, 저탄소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투자 및 기술혁신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에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서의 탄소국경조정 대응전략 수립과 이행을 바탕으로, 세계적 탄소중립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회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제28호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작성자 박현석

21대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미래 정책과 국회의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평등과 양극화 해결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며 여야 간의 대화와 타협이 어려워졌고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의제들을 다룰 여력을 상실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은 소위 ‘금권정치’ 등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탈피하고 실무 중심의 생산적인 국회를 만드는데 기여했지만, 단기적 성과 중심의 의원성과 평가로 인해 중장기적 과제를 긴 안목에서 깊이 있게 다루기 어려운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평가했다.

국회가 국가의 중장기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고 정당간의 협력을 촉진해야 하며, 갈등요인을 안고 있는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들의 노력과 여당과 야당의 지리한 협상 과정이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국회의 성과를 평가하는 새로운 틀을 모색해야 한다.

제29호

디지털화폐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작성자 박성준

본 연구는 향후 화폐제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상화폐(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을 분석하고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전망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지나친 변동성으로 인해 화폐가 아닌 자산으로 기능한다. 역시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되므로 결제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보다 높으나, 관리·감독의 문제로 인해 결과적으로 금융시스템에 부담을 줄 위험이 있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실제로 발행되면 기존의 중앙은행권과 같은 화폐로 기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국내 금융 및 통화정책에 대한 함의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함의 또한 가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민간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특성에 따른 적절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국내적 함의와 더불어 국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제30호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작성자 조해인

이 보고서는 에너지 소비 감소를 위한 '에너지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와 관련, 중장기적 에너지효율향상을 통한 수요관리를 위해 모니터링과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무적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을 주장한다.

EERS를 이행하는 에너지공급자와 전반적 관리 책임을 맡은 관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해 시범사업의 성과와 실질적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해외의 성공적 사례를 깊이 있게 분석하고 벤치마킹해 현재 EERS 비즈니스 모델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찾는 노력을 요구하였다.

제31호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작성자 이선화

복지재정사업의 효율화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정부 간 권한과 재정관계의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고 수평적인 파트너로 사회경제 문제를 풀어나가는 정치적 및 행정적 분권화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 이러한 원칙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복지 확대와 자치분권 강화라는 국가적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복지 분야의 대규모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제도개혁 방안을 도출하였다.

복지보조사업의 구체적 개편방향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첫째, 생계급여, 기초연금 등 전국 표준 지원이 중요한 현금급여성 기초복지사업은 중앙정부의 주도와 재정 책임하에 추진할 것, 둘째, 지역성·다양성·현장성이 중요한 사업은 지자체 재량권을 확대하는 분권형 사업화를 시행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의료급여, 교육급여 및 아이돌봄 사업과 같이 동일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시행자 또는 성격이 다양한 유사·중복 복지사업은 사업을 통합 또는 연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장애인수당이나 아동수당 등 성격이 불분명한 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방향성과 통합 기준을 명확하게 한 후 유사 사업 간 통합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부 개편방안과 함께 재정중립 관점에서 복지재정 전달체계의 기능적 재조정 시나리오를 함께 제시하였다.

제32호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작성자 성문주

본 보고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대학생에 대한 기업가정신의 역할 및 증진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네덜란드 대학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 결과, 기업가정신은 대학생의 창업, 취업 및 진로, 긍정적인 심리사회적 상태 및 태도, 대학생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교육이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확산을 통해 청년층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가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창업·창직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과 우리 사회의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대학의 역할, 교육 패러다임, 교육내용과 방법 측면에서 변화가 필요함이 드러났다. 대학교육 실천의 변화와 함께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통해 도전에 따른 실패위험의 사회적 공유 등 사회문화적 요인의 변화와 정부규제 혁신 및 창업지원 프로세스 개선 등 제도적 요인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도 시사했다

제33호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작성자 이채정

본 보고서는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이 거주지 기준 생활 환경에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보육·유아교육서비스 전달체계 및 초등돌봄체계는 경쟁 수준과 배제 수준에서 아동 인구의 밀도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편차가 관찰되었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및 요양병원은 경쟁 수준 및 배제 수준에 있어 지역별로 다양한 분포 양상이 포착되었다. 서비스 경쟁 수준은 가용한 서비스 기관의 수 대비 서비스 대상 인구를, 서비스 소외 수준은 서비스 범위 내에 가용한 서비스 공급원이 없는 대상 인구 규모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노인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초고령사회의 도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전달체계 확대가 필요하며, 아동 대상 주요 사회서비스는 지속적인 저출생을 감안하여 전달체계가 밀집된 지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제34호

인구충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완화와 적응

작성자 민보경

이 보고서는 인구, 지역경제, 공간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유형을 도출하고, 과거의 인구성장을 전제로 한 지역 발전 전략은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므로 인구감소를 전제로 한 새로운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방 인구감소는 지역의 위기가 아닌 국가적 위기로 인식해야 하며 인구감소와 인구구조 변화가 향후 지속, 심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역 주도로 완화전략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적응전략이 적절히 구사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제35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작성자 정 훈, 여영준

2021년 7월 EU는 'Fit for 55' 입법패키지를 통해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을 도입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내 산업계에 큰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델파이 설문을 통해 국내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또한 AHP를 통해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CGE 모형을 이용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과제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산업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델파이 설문 결과, 산업계 촉진과 전환, 지원과 보호라는 방향성을 기반으로 CBAM 대응을 위한 10가지 산업지원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전략적 방향성	산업지원 정책과제
지원	① 세제 혜택, ② 금융지원, ③ R&D 지원, ④ 보급·상용화 지원
보호	⑤ 인프라 구축, ⑥ 산업별 맞춤형 지원, ⑦ 거래제 합리화
촉진과 전환	⑧ 제도혁신, ⑨ 정책 거버넌스, ⑩ 교육과 홍보

또한 우선순위 분석에서 1순위로 도출된 'R&D 지원' 정책에 대해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CBAM 도입으로 하락했던 GDP, 사회적 효용, 투자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가 회복되고 발전부분의 저탄소화를 촉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산업지원 정책의 경제사회적 긍정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탄소국경조정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산업지원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입증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2) 국제전략 Foresight

제3호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작성자 차정미

중국은 오늘날의 국제질서 변화를 ‘한 세기동안 보지 못했던 대변혁(世界百年未有之大变局)’으로 규정하면서 과학기술혁신이 추동하는 국제정치의 힘의 변화에 주목하고, 이에 근거하여 미래 경제성장의 핵심동력이 될 선도기술을 선점하고 주도해 가기 위한 기술혁신전략에 주력하고, 디지털경제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첨단 기술분야의 연대와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동맹을 구축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정치질서의 장주기이론에서 보여주듯 기술의 부상과 쇠락의 주기가 강대국 부상과 쇠락의 주기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시대 선도기술분야가 부상하고 있는 오늘날, 이와 연계된 중국의 기술적 경제적 부상과 일대일로를 기반으로 확대해 가고 있는 글로벌 기술네트워크, 기술동맹의 구도를 보여준다. 강대국 부상의 핵심요소인 기술혁신과 연대의 두 요소로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을 분석하면서, 인공지능 등 4차산업혁명 핵심선도기술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시기에 미중간 기술패권경쟁이 단순히 기술혁신 경쟁을 넘어 적극적인 기술연대를 구축해가는 기술동맹 경쟁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국제질서의 특징은 새로운 첨단기술의 부상과 함께 기술혁신경쟁과 기술동맹, 기술연대 경쟁이 심화되는 단계에 있다. 인공지능 등 새로운 선도기술이 부상하는 4차산업혁명시대에 세계 주요국들은 선도기술을 주도하기 위한 혁신경쟁과, 기술혁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네트워크 경쟁을 벌이고 있다. 본 연구는 미중 기술패권경쟁의 심화 속에서 한국은 외교적 선택과 전략적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넘어 독자적인 기술혁신과 기술연대의 전략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제4호

포스트 팬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작성자 김태경

이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재난위험경감(Disaster Risk Reduction) 관련 인식 및 거버넌스의 변화를 검토하고 향후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 위험경감 협력을 구상하여 정책 대안을 도출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전통 안보 위협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국제 환경에서 한국이 한반도, 동북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다자적 협력을 주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양자, 소다자 등 다양한 재난재해 협력을 촉진하면서 재난위험경감 관련 지식 및 관심 제고를 위한 시민사회, 학계 및 전문가집단의 역할 증대 및 지역적 접촉·교류협력 프로그램 지원할 필요가 있다. 민간을 망라하는 다층적 네트워크 발전은 한반도 차원의 재난위험경감 공동대응의 비전을 현실화하고 역내 평화공존을 위한 중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이다.

제5호

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작성자 차정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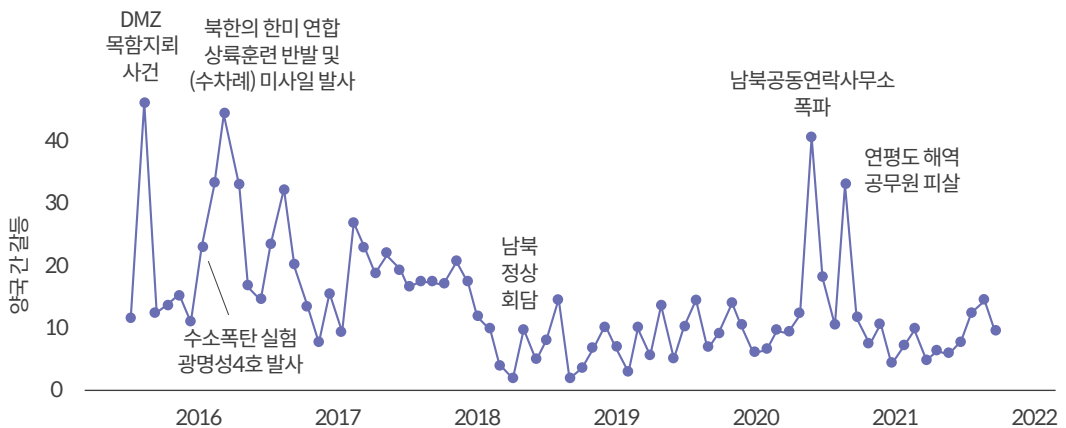
본 연구는 4차산업혁명시대 신형기술의 부상이라는 기술적 요소와 중국의 부상에 따른 글로벌 힘의 질서 변화라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추동되고 있는 미래전쟁 전망과 미중 양국의 군사적 대응에 주목하였다. 특히 인공지능이 미래 질서와 미래 전쟁의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적 시각에서 미중 양국이 전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와 군사혁신-군구조 혁신, 군사기술혁신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 양상-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4차산업혁명시대 인공지능 기술의 군사화와 강대국들의 인공지능 기반의 군사력 경쟁은 단순히 군사력 구축이 아닌 기술패권경쟁의 측면에서 뒷받침되는 있다는 점과 이러한 군사기술혁신 생태계에 광범위한 민간기술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군사와 민간기술의 경계가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미중 인공지능 군사력 경쟁은 지속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4차산업혁명시대 글로벌 기술혁신 경쟁 속에서 미국의 국방혁신부(Defense Innovation Unit) 신설, 중국의 군민용합발전위원회 신설 등 주요 강대국들이 구축해 가고 있는 민군 융합의 군사기술혁신생태계가 한국 군사혁신과 기술혁신생태계 구축에 주는 함의를 분석하고, 한국형 기술혁신생태계 구축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제6호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작성자 박성준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언론 기사를 수집하고 코드화하여 제공하는 GDELT(Global Database of Events, Language, and Tone)의 어조(average tone) 및 사건(event) 정보를 활용하여 주요 국가 간 갈등지수를 도출하고 국제관계의 변화를 추적하였다. 한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한국과 북한, 미국과 북한, 미국과 중국, 호주와 중국 간 갈등지수를 도출한 후 동 지수가 정성적인 측면에서 현실과 부합하는지 검토한 결과,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던 어조(average tone)와 같은 단순 자료보다 국가 간 갈등 양상의 변화를 더 잘 설명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갈등지수는 향후 국제관계의 분석과 예측, 나아가 국가 간 갈등이 해당 국가의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는 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Futures Brief

제1호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작성자 박성원

본 보고서는 이머징이슈 연구의 필요성, 이슈의 발신자 특성, 연구의 기존 사례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이머징 이슈, 그리고 이슈의 정책적 대응 과정을 살펴보았다. 최근 논의되는 이머징 이슈로는 인류의 멈춤을 뜻하는 앤스로포즈(Anthropause), 방어막을 치고 만나는 사적 모임으로 소셜 버블(Social bubbles)의 확산, 소셜 버블의 오프라인 확장판 줌 타운(Zoom Towns), 모든 삶의 공간에 내재된 인공지능과 소통해야 하는 공간 컴퓨팅(Spatial Computing)의 등장, 쪼개진 인터넷을 뜻하는 스프린터넷(Splinternet), 모든 시민을 생체적으로 감시하는 정부(Bio-surveillance Regime), 생물과 기계의 결합 가속화(Bio-digital convergence), 전체게놈 합성(Whole-genome Synthesis) 기술을 통한 새로운 생물의 창조, 그리고 최근 유럽에서 본격 추진하고 있는 순환경제의 귀환(Return of Circular Economy) 등을 살펴보았다.

제2호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분절에서 통합으로

작성자 조해인

이 보고서는 해외 선진국들을 선별해 우리나라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 방식과 비교하며 한국이 앞으로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고 글로벌 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SDGs 목표에 다수의 세부적인 목표를 연결하고,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내 과학기술 산업의 인프라 수준이 높고 연구개발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지만 포용성 부족은 큰 이슈이므로 국내 과학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이 양성평등, 불평등 해소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와 이어지며 SDGs의 다른 목표들과 연계된다면 포용적 혁신이라는 글로벌 의제 실현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제3호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의 숫자: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작성자 이상직

본 연구는 왜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에 대해 막연한 불편감을 느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경제성장이라는 말이 절대 가치를 유지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경제성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GDP(국내총생산)라는 숫자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GDP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국내외의 여러 시도를 확인하고, 경제성장을 강제하는 사회적 조건과 그 조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 무엇인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며 계속 달릴 수도, 멈출 수도 없는 '성장의 딜레마'에서 한국사회가 벗어나려면 근본적인 사고 전환이, 전면적인 체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4호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작성자 박성원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중 가능성과 파급력이 모두 높은 이머징 이슈로 '미중 대립의 새로운 국면, 환경재난의 빈발, 국가 간 갈등 확대, 에너지 전환의 급진전, 기후위기 대응, 새로운 공간의 등장, 가상현실의 급진전, 인공지능의 오용, 알고리즘의 편향성, 탈사회화, 사회적 돌봄 노동의 증가, 새로운 임금체계 합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 모자이크 가족의 확산'을 도출했다. 가능성은 낮지만 파급력 있는 이머징 이슈로는 '토지의 공공성 부각, 에너지 자립과 분권화 결합, 로봇의 자율성 증대와 사회적 합의, 우주 생활권 진입, 에코파시즘'을 예측했다.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발간현황

구분	호	제목	저자	게재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0호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2021.01.07
	제11호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2021.01.21
	제12호	코로나19와 함께 한 1년: 국민의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허종호	2021.02.18
	제13호	동북아 지역의 국제 갈등 양상과 무역분쟁: GDELT를 중심으로	박성준	2021.03.04
	제14호	국내외 에너지전환정책 현황 및 시사점	정 훈	2021.03.18
	제15호	미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의 도전과제와 혁신방안: 과학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여영준	2021.04.01
	제16호	국가장기발전전략 탐색에 따른 개혁의제 제언	이선화	2021.04.15
	제17호	행복조사의 필요성과 한국인의 행복 실태	허종호	2021.04.29
	제18호	일하는 국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	조인영	2021.05.13
	제19호	인구감소시대의 보육·유아교육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탐색	이채정	2021.05.27
	제20호	새로운 국가발전모델의 제안	김현곤	2021.06.10
	제21호	선호미래로 향하는 우회도로	박성원	2021.06.24
	제22호	높은 자살률,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박상훈 이상직	2021.07.08
	제23호	대량 문헌탐색 기반 이머징 이슈 도출	김유빈	2021.07.22
	제24호	재난을 넘어, 혁신을 넘어: 미래를 위한 혁신 정책의 대전환	전 준	2021.08.05
	제25호	어디 사는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까? 도시와 비도시 지역의 행복요인	민보경	2021.08.19
	제26호	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전직지원서비스 정책 주요 이슈와 제언	성문주	2021.09.02
	제27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계 영향과 대응방안	여영준 조해인 정 훈	2021.09.16
	제28호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바라보는 미래 정책과 국회	박현석	2021.10.07
	제29호	디지털화페의 등장과 금융시스템의 변화 전망	박성준	2021.10.21
	제30호	에너지수요관리 중장기 발전 방향 제시	조해인	2021.11.04
	제31호	복지재정 효율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사업 분담체계 개편 전략	이선화	2021.11.18
	제32호	청년층의 기업가정신 향상을 위한 대학교육 방향 탐색	성문주	2021.12.09
	제33호	저출생·고령사회 심화에 따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향 검토	이채정	2021.12.15
	제34호	인구총격에 대응하는 지역의 미래 전략: 완화와 적응	민보경	2021.12.23
	제35호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분석	정 훈 여영준	2021.12.30

구분	호	제목	저자	게재일
국제전략 Foresight	제3호	미중기술패권경쟁과 중국의 강대국화 전략	차정미	2021.08.12
	제4호	포스트 펜데믹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재난위험경감 협력방향	김태경	2021.10.14
	제5호	미래전쟁과 군사-기술의 연대 : 인공지능의 군사화와 민군융합	차정미	2021.11.11
	제6호	빅데이터(GDELT)를 통해 살펴본 국가 간 갈등의 변화	박성준	2021.11.25
Futures Brief	제1호	이머징 이슈 연구와 세계 동향	박성원	2021.07.29
	제2호	한국의 미래 SDGs이행 방향에 대한 논의 : 분절에서 통합으로	조해인	2021.08.26
	제3호	경제성장이라는 세속 종교와 GDP라는 마법 의 숫자: 대안 탐색을 위한 시론	이상직	2021.09.30
	제4호	2022년 주목할 15개 이머징 이슈	박성원	2021.12.02

— 국회미래연구원

Ⅱ 2021년 주요 활동

—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주요행사
2. 미래기고
3. 언론보도
4. 뉴스레터

1. 주요행사

제2대 이사회 위촉식 개최

일시 2021.02.24

국회미래연구원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주재로 제2대 이사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사회 위촉식에는 새로 구성된 제2대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진이 참석하였으며 이사진은 박명광 이사장, 강병수 교수, 권남훈 교수, 박진희 교수, 양정호 교수, 차영환 교수, 최경욱 교수, 한상익 교수와 감사인 강경운 변호사로 구성됐다.



제1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일시 2021.04.21

국회미래연구원은 '지역소멸 위기와 대안: 지방대학의 미래'를 주제로 제1회 국회미래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은 국회상임위원회(교육위, 행정안전위, 국토교통위)와 의원연구단체(저출생·인구절벽대응국회포럼, 국민미래포럼, 국가재조포럼)의 공동주최로 열렸으며 포럼은 '미래 대안'을 중심으로 고등·평생 교육, 지역경제, 혁신, 균형발전, 삶의 질 문제 등에 복합적으로 접근하여 논의했다.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토론회 공동 개최

일시 2021.05.06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의원연구단체 미래경제연구회와 공동으로 '인공지능의 사회변화와 국회의 대응 토론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 변화될 사회의 모습을 조망하고 국회 차원에서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원 3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

일시 2021.05.06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미래전략: 성찰과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개최한 개원 3주년 기념 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박명광 국회미래연구원 이사장, 성경룡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공동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 이태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이 좌장과 토론자로 참석했다.



보좌진의 시선으로 본 국회의 현재와 미래 공동 세미나 개최

일시 2021.06.09~23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직원연구모임 <의회정치의 미래>와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첫 세미나는 '미래지향적 국회만들기'를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는 '입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 번째 세미나는 '국회의 갈등과 미래'를 주제로 진행됐다.



국회미래연구원·뉴스1 업무협약 체결

일시 2021.07.28

국회미래연구원과 종합 뉴스통신 '뉴스1'은 '국민의 미래 문해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향후 2년간 국회미래연구원은 내·외부 전문가가 '미래'를 주제로 집필하는 다양한 분야의 칼럼을 뉴스1에 게재하고 전문역량 공동 활용 체제를 마련하는데 협력하게 됐다.



탄소국경조정! 산업 대응 지원과 입법과제 세미나 개최

일시 2021.08.30

국회미래연구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과 공동으로 임종성 의원실(국회 기후포럼 연구책임의원)에서 주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탄소중립의 이행구속력 강화를 위한 법제화 및 법령과 정부 계획의 연계를 통한 정책 지속성 확보 및 탄소국경조정 대응을 위한 국내산업계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지원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고 산업 지원을 위한 10가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제2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일시 2021.08.31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의 학교교육과 평생학습: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한 제2회 국회미래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는 김신일 서울대 교육학과 명예교수, 김진경 국가교육회의 의장, 정일환 한국교육학회 회장,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강대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원장,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박혜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장, 송해덕 중앙대 글로벌인적자원개발대학원장 등이 참석했다.



평화정착과 의회의 역할: 해외사례와 국회에의 함의 세미나 개최

일시 2021.09.28

국회미래연구원은 온라인 세미나 '평화정착과 의회의 역할: 해외사례와 국회에의 함의'를 개최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국제전략연구센터 개소에 따른 첫 웨비나로 마련한 본 세미나는 아일랜드 평화과정, 독-불 화해, 양안관계의 평화정착 노력에서 의회 및 의원외교, 교류의 역할을 분석하고 향후 남북국회회담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국회미래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업무협약 체결

일시 2021.09.28

국회미래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 융합연구 교류와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인문사회와 과학기술의 융합, 국가 미래전략 설계 및 실현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국민 선호미래 실현을 위한 정책 및 과학기술 수단 발굴, 정부출연연구원의 기술 및 사회적 역할을 위한 도전과제 발굴 등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미래연구원 국립정신건강센터 업무협약 체결

일시 2021.10.15

국회미래연구원은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장기 사회변화에 따른 정신건강의 미래전망에 관한 사항,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교류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과 관련된 사업, 연구 및 학술 활동의 공동 추진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에 대한 바람직한 문화조성을 위한 정보교류, 기타 상호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교류하기로 했다.



제3회 국회미래포럼 개최

일시 2021.11.25

국회미래연구원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제3회 국회미래포럼을 성료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토론에 참석했다. 박현석 혁신성장그룹장은 ‘불평등·양극화와 의회정치 역할’을 주제로 국가중장기 정책선호 설문조사, 국회의 중장기 국가의제 기획기능을 살펴보고 중장기 정책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인구충격, 지역주도의 미래 전략 공동세미나 개최

일시 2021.12.08

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도시행정학회와 함께 ‘인구충격, 지역주도의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라는 국가 난제를 논의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미래연구원과 새로운 도시행정을 제시하는 한국도시행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 지역 정책 설계를 위한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미래비전 2037」 종합보고회 개최

일시 2021.12.08

국회의장 직속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가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고 성과확산 계획을 논의하는 종합보고회를 개최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하여 주요 대학의 전문가 60여 명과 공동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추진하였으며 4대 중점목표 아래 12개의 해법을 제안했다.



제3회 미래전략 컨퍼런스 - 격변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다: 회복과 대전환 개최

일시 2021.12.10

국회미래연구원, 기획재정부가 주최하고 한국개발연구원이 주관한 ‘제3차 미래전략 컨퍼런스 - 격변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다: 회복과 대전환’이 유튜브 생중계로 개최됐다. 본 행사에서는 주요산업 부문별 전망과 과제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과 새로운 거버넌스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세미나 개최

일시 2021.12.15

국회미래연구원은 김정호 국회의원실, KOTRA와 공동으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도입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부담 비용 추산과 이에 대한 수출업계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 전문가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국민행복포럼 개최

일시 2021.12.21

지난 9월부터 격주 화요일마다 8명의 국내 행복연구자들은 2019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민행복포럼을 진행하였다. 국민행복포럼은 기관 내·외부 참석자들에게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행복연구의 허브로서 활동해왔다.



국회미래연구원 미래크리에이터 1기 수료식 개최

일시 2021.12.23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크리에이터 1기 수료식을 메타버스 방식으로 개최했다. 미래크리에이터는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대한민국 미래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진과 협업해 활동하였으며 미래연구에 대한 청년의 의견과 시각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왔다.



2. 미래기고

국회미래연구원은 내부 연구진을 주축으로 뉴스1와 공동기획을 통해 매주 '미래생각'을 게재하고 있으며 미래 예측 및 대응 전략과 관련하여 정계, 학계,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미래칼럼'을 통해 기고하여 대국민 소통을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미래생각 총 52회, 미래칼럼 총 26회를 게재하였다.

2021년도 미래생각 현황

회차	제목	기고자	게재일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시작점에서	정 훈	2021.01.07
2	미래 교사는 인재양성 위한 리더가 되어야	성문주	2021.01.14
3	기후변화와 탄소국경세	박성준	2021.01.21
4	정부 중장기계획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으려면	여영준	2021.01.28
5	출산 및 양육정책의 패러다임 확장에 대한 논의를 기대하며	조인영	2021.02.02
6	코로나19 시대, 슬기로운 직장생활	박성원	2021.02.09
7	이머징 이슈와 보물찾기	김유빈	2021.02.16
8	초연결(超連結), 그 너머의 세상	민보경	2021.02.23
9	백신의 수요를 생각하다	허종호	2021.03.08
10	"정책혁신은 데이터 혁신에서 시작된다"	이채정	2021.03.09
11	민주 공화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제임스 매디슨의 헌법 설계	박상훈	2021.03.17
12	위기의 시대를 구원할 이단아적 경제학을 기다리며	이선화	2021.03.23
1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R&D 체계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정 훈	2021.03.30
14	평생교육으로서 부모교육이 답아야 할 것	성문주	2021.04.06
15	내부 정보와 부정행위	박성준	2021.04.13
16	포용적 구조전환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의 도전과제	여영준	2021.04.21
17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일관성	조인영	2021.04.26
18	글로벌 트렌드 2040과 한국의 미래	박성원	2021.05.04
19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할 준비	김유빈	2021.05.11
20	걷기, 미래도시의 길라잡이	민보경	2021.05.18
21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허종호	2021.05.25
22	정해진 미래, 정해갈 미래	이채정	2021.06.01

회차	제목	기고자	게재일
23	글로벌 최저법인세, 코로나 이후 경제시스템 전환의 신호탄이 될 것인가?	이선화	2021.06.09
24	서울선언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정 훈	2021.06.16
25	대통령제, 이대로는 안 된다고 보는 이유	박상훈	2021.06.23
26	혁신성장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방향, 무엇이 달라져야 할까	성문주	2021.06.30
27	암호화폐를 통해 살펴본 우리 사회의 단면	박성준	2021.07.07
28	미래 지역혁신을 위한 사고의 전환과 정책과제	여영준	2021.07.14
29	안정성과 유연성의 균형, 그리고 미래의 고용형태	조인영	2021.07.21
30	세대 갈등과 타협의 정치	박현석	2021.07.28
31	한국인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생애의 형식과 삶의 의미	이상직	2021.08.03
32	정작 중요한 미래의 신호는 '너무 약해' 들리지 않는다	전 준	2021.08.10
33	인공지능의 국제정치	차정미	2021.08.18
34	지구 위협하는 기후변화...나만의 윤리적 소비 고민할 때	조해인	2021.08.24
35	경제학자들이 읽어야 할 새로운 경제학	박성원	2021.09.01
36	위기의시대, 통섭적전문가 양성의 계기로 삼아야	김유빈	2021.09.08
37	경제학에서 유래한 역선택, 결국 유권자의 몫	민보경	2021.09.14
38	자가격리를 다시 생각해봐야할 때	허종호	2021.09.16
39	원칙없는 재난지원금과 맥주집사장님의 원칙	이채정	2021.09.29
40	팬데믹과 '새로운 자본주의'의 등장	이선화	2021.10.06
41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한 소고	정 훈	2021.10.13
42	포퓰리즘은 민주적인가	박상훈	2021.10.20
43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성문주	2021.10.26
44	디지털 위안화와 미중 경쟁	박성준	2021.11.02
45	겪어보지 못한 재난을 대비하는 방법	김은아	2021.11.10
46	기술과 학습의 경주 속 미래 혁신체제 발전경로 모색해야	여영준	2021.11.16
47	청년 인재들과 미래를 준비하자	박현석	2021.11.24
48	우리는 누구인가: 근대적 라이프코스의 구조	이상직	2021.11.30
49	보통 사람들의 '미래학' SF로 읽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미래	김태경	2021.12.07
50	미·중 기술패권경쟁 시대 '스마트 파워' 외교전략	차정미	2021.12.14
51	초현실주의적 영감이 필요한 지금	조해인	2021.12.22
52	음악, 노인, 유머	박성원	2021.12.29

2021도 미래칼럼 현황

회차	제목	기고자	게재일
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토	정창무(서울대학교 교수)	2021.01.14
2	“탄소국경조정의 현황과 미래영향에 관한 소고”	김성진(한국환경연구원 부연구위원)	2021.01.28
3	대전환기의 분기점으로서 2021년의 국가전략	곽재원(가천대학교 교수)	2021.02.09
4	국제 제도 플랫폼의 미래	황석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02.23
5	농업과 토지이용의 변혁, 탄소중립 달성의 가능성을 높인다	박훈(고려대학교 연구교수)	2021.03.09
6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위한 산업정책 제언	김인철(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03.23
7	개인이 미래다!	전상인(서울대학교 교수)	2021.04.06
8	교원평가제도와 성과급: 취지와 개선점	이성호(중앙대학교 교수)	2021.04.21
9	과학기술 인재로 쌓아 올릴 한국의 실력	송하중(경희대학교 명예교수)	2021.05.04
10	답은 늘 규제가 아니라 시장이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근주(이화여자대학교 교수)	2021.05.18
11	중국의 공세적 외교정책 강화와 한중관계의 미래	함명식(지린대학교 교수)	2021.06.01
12	2022년 1월 미래 시나리오	최항섭(국민대학교 교수)	2021.06.16
13	신뢰는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다	곽노필(한겨레신문 선임기자)	2021.06.30
14	코로나 슬라이드와 교육 당국의 역량	이용상(영남대학교 교수)	2021.07.14
15	전환시대의 공공계획	문정호(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07.28
16	미래는 위험거버넌스에 달려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임무.	김태윤(한양대학교 교수)	2021.08.11
17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최진호(아주대학교 명예교수)	2021.08.25
18	화이트칼라로봇의 등장과 메타버스에서 일하는시대	이승민(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위원)	2021.09.08
19	사라진 미래과제 0순위, 공적연금 재정안정화 개혁	양재진(연세대학교 교수)	2021.09.16
20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	방준성(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10.06
21	기본소득토지제도와 주택문제	정창무(서울대학교 교수)	2021.10.26
22	‘코로나바이러스·중국·기후변화’ 3C의 위기를 넘어서	곽재원(가천대학교 교수)	2021.11.03
23	과학기술로 실력과 품격을	송하중(경희대학교 명예교수)	2021.11.16
24	교육계의 미래를 위한 제언	이성호(중앙대학교 교수)	2021.11.30
25	탄소중립 선언과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허은영(서울대학교 교수)	2021.12.14
26	메타버스와 포용도시... 우리는 어떤 미래사회 만들어야 할까	변미리(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1.12.29

3. 언론보도

국회미래연구원은 2021년 언론홍보 활동을 통해 연구원의 연구성과, 행사 등을 언론사와 공유했다. 이에 중앙일보, 한겨레 등 다양한 언론사가 연구원과의 협업 및 연구성과 활용을 통해 다수의 기사를 보도했다.



KBS(2021.02.04)



한겨레(2021.12.08)

주요 일간지 보도내용

매체명	주요내용	보도일
경향신문	통과 쉬운 '비쟁점' 법안 양산...상임위 넘어도 '육상육' 법사위	2021.01.06
이투데이	"2050년 한국은...공정 개선되나 갈등은 계속"	2021.01.07
스트레이트뉴스	국회미래연구원, "코로나19 백신접종 의향, 국민 60.1% '있다' vs 24.6% '없다'"	2021.01.29
TBS	흔들리는 주택 정책... '급급한 용적률 완화' 문제 없나?	2021.02.03
KBS	"전북 백신 접종 의향 전국서 가장 낮아...부작용 우려 커"	2021.02.04
헬스조선	코로나19 공포가 음주·흡연 큰폭으로 줄었다	2021.02.19
한겨레	한국인 행복지수 10점 만점에 7.83점...2·3위 전북·경남, 1위는?	2021.04.30
	코로나 이후 주목해야 할 '이머징 이슈' 9가지	2021.08.02
	2022년에 주목할 '이머징 이슈' 15가지...1위는?	2021.12.03
	'성장' 벗고 '성숙' 사회로...국회, 첫 국가 장기비전 제안	2021.12.08
국제뉴스	10~20대는 능력주의? '공평한 분배' 더 바라	2021.06.16
이데일리	왜 우리나라 자살예방은 효과가 없었을까	2021.07.10



— 국회미래연구원

III 2022년 연구사업 방향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2022년 연구사업 방향
2. 2022년 연구과제 목록

1. 2022년 연구사업 방향

□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연구성과 확대

- 국가적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중장기 아젠더 연구 강화
-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미래비전 2037」과 2022년 국가중장기발전전략 중점 연구의 연계 기획 확대

□ 기관 대표연구로서 미래예측 연구 강화

- 기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미래환경 예측 연구의 체계를 확립하고 정례적 연구 추진
- 장기-중단기 시계의 교차 분석을 통해 거시적 트렌드 분석 및 주요 이슈별 미래 현안 대응 역량 강화
- 정량·정성 기반 예측 방법론 고도화로 예측 합리성을 제고 및 이머징 이슈 등 다양한 미래 이슈 분석

□ 공신력과 활용성을 갖춘 조사연구 강화

- 「삶의질 데이터센터」 구축을 통해 데이터 축적·활용을 위한 기반 마련
- 기관 대표 조사연구로서 ‘한국인의 행복조사’의 지속 수행
- 기관 수행 과제와 연계성을 고려한 참여형 공론조사 추진

□ 권위있는 국제전략 종합연구 체계 확립

- 국제전략연구센터를 구심점으로한 중장기 국제전략 및 의회외교 강화 연구 확대
-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공동연구, 학술교류 강화
- 국제전략 연구 결과에 기반한 한국의 외교전략과 의회 역할 및 과제 제시 성과 창출

□ 연구기획-성과확산에 이르는 연구활동 전주기 체계화

- 18개 상임위 추천으로 연구자문위원회 구성 운영
- 국회 내 미래이슈 논의의 장인 ‘국회미래포럼’ 확대 추진
- 청년세대로 구성된 ‘청년미래위원회’를 통한 연구성과 확산
- UN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활성화

2. 2022년도 연구과제 목록

부문	구분	연구과제	책임자
중점연구	미래예측 및 분석	대한민국 미래전망 연구	박성원
	국가중장기 발전전략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운영 및 미래의제 제도화 전략	김유빈
		혁신성장을 위한 학습순환사회로의 전환 전략	성문주
		전환기 청년의 미래	이상직
		고용 없는 저성장 · 초고령 시대의 복지체제 재편 연구	이채정
		국민 주거안정과 자산 불평등 완화를 위한 부동산 중장기전략	이선화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중장기 전략 연구	정 훈
		순환경제 미래영향 및 국가전략	김은아
		국민통합을 위한 의회정치 연구	박현석
	국제전략	중장기 국제전략	차정미
연구기반	미래연구 데이터 구축	한국인의 행복과 가치관 연구	허종호
		미래정책과 국민의 선호 연구	박성원
		미래사회 대응 지표체계 및 모니터링 연구	민보경
	미래이슈 탐색연구	녹색전환과 환경갈등의 미래 탐색연구	김은아
		한반도 평화구축의 미래와 여성	김태경
		대전환 시대의 지역발전 정책 이슈	민보경
		러시아 경제제재의 지정학적 함의	박성준
		21대 하반기 국회의원 보좌진의 미래의제 인식 조사	박현석
		돌봄 관계의 미래: 장애인 탈시설 정책 검토를 중심으로	이상직
		고령자 고용 · 노동정책을 위한 입법과정론 모색	정혜윤
		강대국 경쟁의 부활과 개발도상국의 미래 연구 : 중국의 개발도상국 외교와 국제질서의 미래	차정미
성과확산	연구기획 및 지원	유희수	
	연구 성과확산	김병수	

부록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1. 설립목적
2. 주요연혁
3. 조직 및 인원
4. 비전, 목표, 전략추진체계

1. 설립목적

□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조(목적)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 강화와 국가 발전에 이바지

2. 주요연혁

12.12 「국회미래연구원법」 공포



2017



2018

- 01.10. 국회미래연구원 설립준비위원회 (위원장: 조동성) 구성
- 03.21. 초대 이사회(이사장: 김선욱) 구성
- 05.21. 국회운영위 초대원장(박진) 임명동의안 가결
- 05.28.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 개최

05.20. 국회운영위 제2대 원장(김현곤) 임명동의안 가결

05.27. 국회의장 제2대 원장 임명 (임기시작일 '20.05.30)

11.27.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위촉식 개최(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

12.24. 제2대 이사회(이사장: 박명광) 위촉 (임기시작일 '20.12.24)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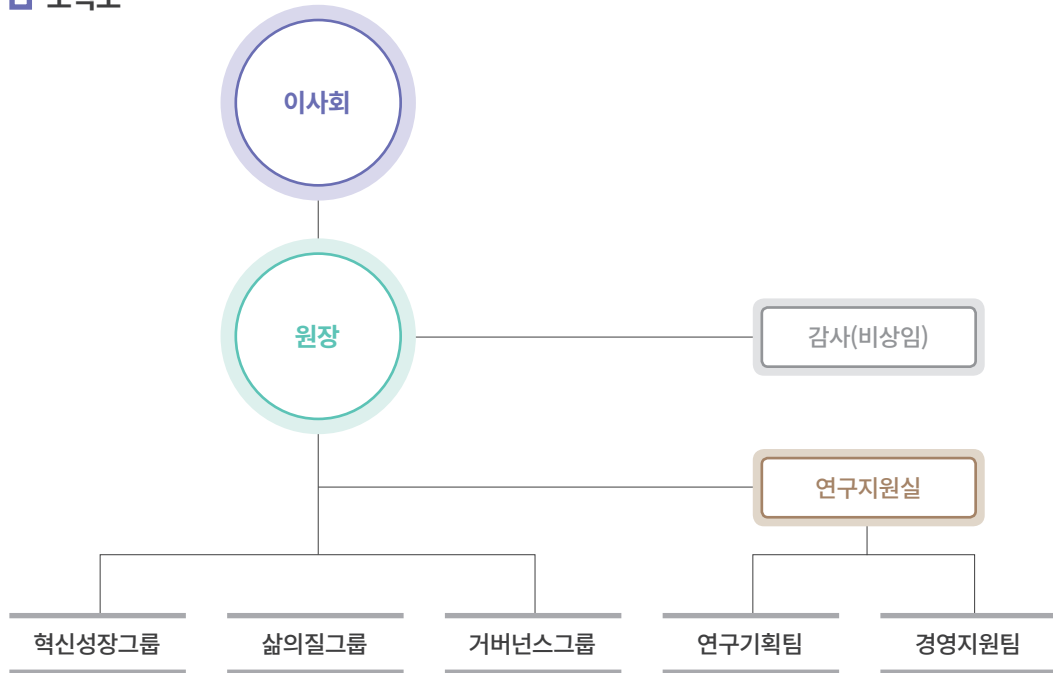


2021

- 12.08.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 「미래비전 2037: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전환」 보고서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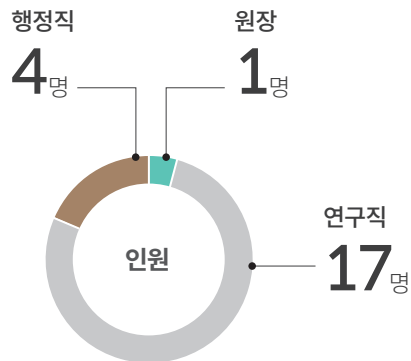
3. 조직 및 인원

□ 조직도



※ 국회미래연구원법 제13조(사업)에 연구 분야 명시: 통일·외교·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

□ 인원



※ 비상임 임원(이사, 감사) 및 비정규직 제외 정원 기준, 2022년 6월 기준

원장
1명
연구직
17명
행정직
4명
계
22명

4. 비전, 목표, 전략추진체계



경영목표	추진전략	실천과제
1. 국민이 공감하는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제시	1.1. 미래변화의 과학적 예측·분석 및 국민참여형 국가미래상 제시	① 과학적 예측을 통한 미래 아젠더 발굴 강화 ② 바람직한 국가미래상 제시
	1.2. 국가미래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③ 핵심 국가아젠더 중심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④ 국제환경 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국가대응력 강화
2. 미래연구 플랫폼역할 강화 및 정책활용도 제고	2.1. 미래연구 교류·협력 및 플랫폼 역할 강화	⑤ 국내 연구네트워크와 시너지 제고 ⑥ 글로벌 전문기관·전문가와 협력 강화
	2.2. 소통채널 다각화를 통한 정책활용도 제고	⑦ 국회·정부·국민 정책고객과의 소통 강화 ⑧ 매체 다변화를 통한 연구성과 홍보와 확산
3. 조직역량 제고 및 경영체계 선진화	3.1. 인적역량 강화 및 조직역량 제고	⑨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기관 인재상 추구 ⑩ 인적규모 확대와 인적교류 플랫폼 활성화
	3.2. 연구활동체계 혁신 및 조직운영시스템 선진화	⑪ 기관미션 중심의 연구활동체계 혁신 ⑫ 시너지 창출을 위한 조직운영시스템 선진화

2021년도 국회미래연구원 연차보고서

발간일	2022년 6월 30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222 호 TEL 02-786-2190
인 쇄	명문인쇄공사 TEL 02-2079-9200

ISSN	2951-0554
------	-----------

• 이 자료는 **국회미래연구원 홈페이지**(www.nafi.re.kr) 및
열린국회정보(open.assembly.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